

정책보고서 2011-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연구

최현수
최준영 이서현 박경희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10.11.25)한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2011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목 차

요 약.....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7
제2장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23
제1절 보육정책 기본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관련 주요내용	25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29
제3장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 관련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초분석	39
제1절 분석 DB: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	41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47
제4장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55
제1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및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추정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	57
제2절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적용 시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추정	68

제5장 중장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방안 관련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75
제1절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추가 확대방안	77
제2절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적용 확대방안	87
제6장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관련 향후 정책과제	109
참고문헌	133
부 록	135

< 표 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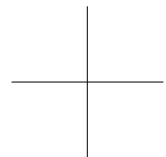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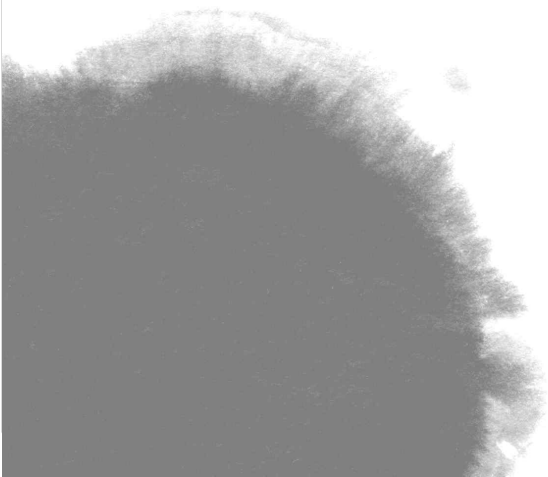
< 그림 목차 >



01

K
I
H
A
S
A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난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 개편에 따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기존 기초보장수급자(1층)과 차상위계층(2층) 이하에서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음
 - 기존의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중 전액지원 대상을 제외한 부분지원 대상 선정기준 설정방식 및 지원수준 역시 개편됨
 -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3층, 80% 지원), 50~70%(4층, 60% 지원), 70~100%(5층, 30% 지원)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구에서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50~60%(60% 지원), 소득인정액 하위 60~70%(30%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로 변경됨
- 한편, 2010년 9월 발표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따라, 2011년부터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 대상은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70% 이하로 확대되며, 이에 따른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상향 조정 및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분위 개념
 - : 우리나라 보육료 지원대상 전체 영유아 가구가 보유한 소득 및 재산을 분석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가구 균등화지수에 따라 균등하게 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계층으로부터 높은 계층까지 소득인정액 분위를 결정함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당시부터 2010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는 선정기준은,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점인 2011년 3월부터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임

- 2011년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및 2009년 선정기준 도출 시점 이후 2010년까지의 소득수준 상승 및 재산가치 변동이 반영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모의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2011년 선정기준(안) 도출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히,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맞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 방식 역시 2011년부터 확대 개편 예정이며,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에 대한 다양한 근로소득공제 적용방안 분석을 목적으로 함

- 현행 맞벌이가구 공제 방식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중 낮은 소득에 대하여 25% 공제(75%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이며, 2011년부터 부부합산 근로소득의 2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 예정이므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수준은 대폭 상향 조정됨

— 한편,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이후 2010년 구축된 사회 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등 정보 인프라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관련 개선 필요사항을 추가적으로 도출하고자 함

□ 연구의 기대효과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사전 모의분석 및 도출을 통하여 정책집행 과정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 추가 확대 및 선정방식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선정기준 도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에 따른 전액지원 대상 선정여부 판단기준인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개념 및 모의분석을 통해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표성 있는 선정기준 산출을 위해 건강보험, 보육료 수급통계 등을 기반으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DB 구축
- 분석 DB 구축에서 누락된 주요 소득 및 재산 항목에 대한 보정 여부 및 방식에 따른 선정기준 조정안 검토
- 분석대상 영유아 가구 정의 및 범위, 선정기준 도출 근거가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이를 구성하는 소득 및 재산항목, 균등화 지수의 적용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책결정 필요
- 그러나, 2009년 7월 추진된 바 있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 당시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선정기준 산출을 위하여 건강보험 공단 보유 공적자료,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보육료 수급 통계 등을 기반으로 영유아 가구 DB 구축 및 분석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잠정 조정안 도출

□ 맞벌이 가구,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 등 선정기준 확대 적용방안 마련

— 2011년 확대 개편 예정인 맞벌이 가구 대상 근로소득공제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맞벌이 가구의 개념 검토 및 다양한 근로소득공제 적용 방안 검토 및 도출

- 현행 우리나라 소득과약 인프라 및 근로유형, 복지 및 조세정책에

적용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의 개념 검토

- 확대 개편 예정인 부부합산 방식의 근로소득공제의 다양한 적용 수준별 모의분석

□ 2009년 개편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중 개선 필요사항 도출

- 보육료 지원 신청절차, 보장단위(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소득인정액 개념에 포함될 소득 및 재산항목별 평가범위 및 기준,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재산가액 산정기준, 기초공제액 등) 등에 있어 일선에서 제기되는 개선 필요사항 도출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 및 맞벌이 가구 공제 적용방안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 영유아 규모 및 재정변화 분석

-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및 맞벌이 가구 공제 적용방식 및 수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규모 및 소요예산 변화 분석

□ 각 장별 연구내용의 구성

- 제2장에서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관련 중장기 계획과 그 동안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조정방향을 검토함
 - 보육정책 기본계획(새싹플랜, 아이사랑플랜)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상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관련 주요내용을 제시함
 - 2009년 이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향을 살펴봄
- 제3장에서는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을 위하여 정책 모의분석 및 선정기준 도출에 활용하기 위한 영유아 가구 모집단의 분석 DB 구축 과정 및 주요 변수 등을 제시함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 및 선정방식 개편 모의분석 관련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에 관한 기초분석을 실시함
- 제4장에서는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실시하여 잠정적 선정기준안을 제시함

-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정책 모의분석 과정에서, 2009년 7월 확대 개편과정에서 검토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인 보장단위,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초공제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수준, 가구 균등화 지수, 건강보험 공적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분석 DB에서 누락된 소득 및 재산 항목별 보장여부 등을 반영함
- 도출된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현행 보장단위, 기초공제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6.68%, RT 가구 균등화 지수 적용)을 모의 적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 규모 변화를 분석함
- 이와 더불어,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및 선정방식이 지닌 쟁점 및 한계를 제시함
- 제5장에서는 중장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확대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추가 확대(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80~90%로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 확대(현행 부부합산 근로소득의 25%에서 30~50%)와 관련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결과를 제시함
- 제6장에서는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시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 지역 및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 분포의 불균형 등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와 관련하여 향후 검토 및 개편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함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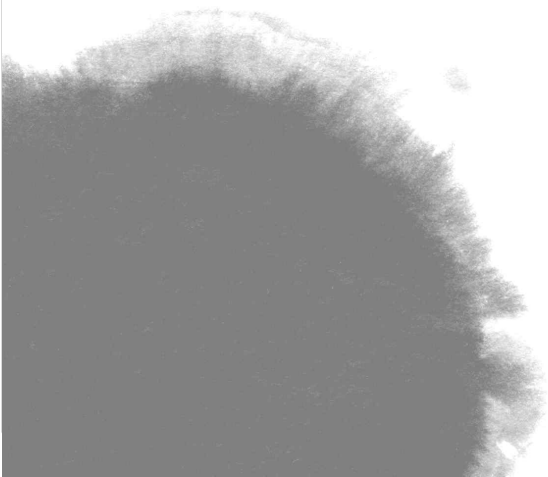
□ 문헌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및 보육료 지원 정책현황 분석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관련 국내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현지조사
 - 보육료 지원 및 유사 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맞벌이가구 개념 및 적용방안 관련 국내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조사

-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자문회의
 - －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보육료지원 신청 영유아가구, 보육시설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을 구성하여 FGI를 실시
 - 보육료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선정기준 조정방안 및 맞벌이가구 공제 적용방안 도출
- 심층 통계분석
 -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 및 조정을 위한 모의 분석틀(policy simulation frame) 및 DB 구축
 - 소득인정액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소득 및 재산항목 등 선정기준 조정방안 마련에 필요한 요소 확정
 -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방식, 정보 인프라 개편 후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모의 분석을 위한 프레임 및 DB 구축방안(layout) 마련
 - 추출원칙 및 대상
 -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2005년 1월1일 이후부터 DB 추출시점까지 출생한 전체 영유아 정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정보로부터 영유아가 포함된 전 가구의 가구원을 추출하여 이들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 자료를 해당 시점 기준으로 추출하여 병합
 - －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공적자료 활용지침을 반영하여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정확성 제고 및 보정방안 검토
 -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구축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0~50%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하위 50~70% 부분지원에 해당)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기초 통계 자료 추출 및 적용을 통한 보정방안 검토
 - －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원자료(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된 영유아 가구 분석 DB를 활용하여 2011년 보육료

-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모의분석 수행
-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초통계 생산 및 비교 검토
-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모의분석에 기초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기초통계, 분위별 소득인정액 등 다양한 선정기준안 제시 및 비교 검토
-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규모 및 예산변화 분석
- 보육시설 이용률을 고려한 특성별 지원대상 영유아 변화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선정기준 조정에 따른 예산 변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제2장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제1 절 보육정책 기본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관련 주요내용

1. 새싹플랜 (2006~2010년)

□ 수립배경

- 2006년 수립된 제1차 중장기 보육정책 기본계획인 새싹플랜 (2006~2010년)은 현재 민간 위주로 보육서비스가 민간에 집중되어 있고, 보육서비스의 수준이나 다양성이 수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다자녀 보육료 지원 비율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하고자 함.
-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을 2010년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80.8%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약 1,008천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함.
- 그러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에 한정됨.

2. 아이사랑플랜 (2009~2012년)

□ 수립배경

-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개편하고자 하여 앞에 제시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어 2009년 시행계획을 함께 마련함.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추진방안

-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소득 하위 80% 이하 영유아 가구까지 확대하고자 함.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1년에 소득하위 70%이하까지에서 2012년 소득하위 80%이하까지로 추진계획에 있음.

구분	보육료지원 확대 관련 「아이사랑플랜」 계획(안)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득계층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소득하위 80%이하
지원대상자 (추정치)	61만명	82만명	99만명	111만명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관련 기존 새싹플랜과 아이사랑플랜의 차이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보육비용 부담완화
 - 기존 새싹플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에 한정하였으며,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 목표로 하였음.
 - 아이사랑플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소득 하위 80% 이하 영유아 가구까지 확대하고자 함.

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년)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당시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음.

-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만 0~4세아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로 만 0~4세 영유아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를 대상을 차등 지원하는 것에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 7월 이전에는 만 0~4세 영유아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를 대상을 차등 지원되었으며,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을 통해 전액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소득인정액 하위 50%이하까지 확대하였음
 - 부분지원 대상 영유아 가구의 선정기준 역시 소득인정액 하위 50~60%(보육료 60% 지원), 60~70%(보육료 30% 지원)까지 확대하였음

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년)

□ 저출산의 핵심요인인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이 일부 소득계층에 한정됨에 따라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보육료 지원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 0~4세 차등보육료 지원(1991년), 만5세아 무상보육(1999년),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2005년),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강화(2010년)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에 이어 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만 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2011년까지 소득인정액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을 가짐.
- 상위 30% 소득가구는 맞벌이가구를 위주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2010년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였던 것에서 2011년 부부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맞벌이가구의 소득산정 기준을 완화할 계획을 가짐.

구분	보육료지원 확대 관련 주요「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만 0~4세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차등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 → 소득인정액 하위 70%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하위 50% 확대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 완화) 부부합산소득 25%차감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1. 보육료 지원대상 개편(2009년 7월) 이전 선정체계

□ 기본구조

- －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영유아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 자산 조사를 통해 산출된 소득인정액(선정방식)을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기준액과 비교

□ 보육료 지원 대상 계층구분 및 차등보육료 지원수준

- － 기존의 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지원계층은 5층의 계단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지원계층의 경계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은 가구규모에 따라 각각 설정하였음.
- － 전액지원(100%)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 영유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영유아 등 법정 지원 대상(1층)과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2층)을 그 대상으로 함.
- － 부분지원 80%는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이상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발표자료)의 50%이하(3층)를 그 대상으로 함.
- － 부분지원 60%는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발표자료)의 50~70%이하(4층)를 그 대상으로 함.
- － 부분지원 30%는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발표자료) 70~100%이하(5층)를 그 대상으로 함.

□ 보육료 지원계층별 선정기준

- 기존의 가구규모에 따른 계층별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었으며, 1층과 2층은 최저생계비, 3~5층은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활용하여 선정기준액을 도출 및 적용하였음.

□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방식(자산조사 체계)

- 기존의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개념 및 자산조사 방식을 준용하고 있었음.

□ 가구규모 및 지원계층별 선정기준

- 2008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4인가구의 경우 전액지원 대상인 1~2층, 즉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선정기준은 151만원이었음
 - 3층(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의 선정기준은 199만원, 4층(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의 선정기준은 278만원, 5층(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상)의 선정기준은 398만원이었음.

지원 대상	지원계층 구분	지원 비율	2008년 선정기준 (단위: 만원)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전액 (100%)	—	—	—	—
2층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123	151	178	205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부분 (80%)	178	199	210	230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부분 (60%)	250	278	294	322
5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분 (30%)	357	398	420	460

2. 보육료 지원대상 1차 확대 개편(2009년 7월) 이후 선정체계

□ 기존 보육료 선정기준의 한계점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와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수준을 혼용하였다는 점에서 정합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재산항목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어렵고, 전체 조사 표본 가운데 영유아가구의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영유아가구의 전액지원 및 부분지원대상의 선정기준액을 도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특히, 선정기준액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던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의 선정과정에서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어 해당가구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는 것이 어려움.
- 전체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의 분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가구 전체에 대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 자료가 구축된 DB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시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구축하더라도 이를 통한 선정기준의 도출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괴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매년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짐.
- 그러므로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개선 및 재정립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였음.
 - 특히,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계획된 무상보육(전액지

원) 대상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하위 50%이하 가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선정기준액 도출방식을 결정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무상보육(전액지원) 뿐만 아니라 부분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한 선정기준 역시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음.

- 이에 전체 영유아가구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DB구축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 항목별 원자료를 중심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한 DB구축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재산항목에서 일부 누락된 항목이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나 별도의 실태조사 없이 전체 영유아가구의 DB구축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를 활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 기존 보육료 선정방식의 한계

-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방식이 준용되고 있었음.
- 그러나 보육료 지원제도는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두 제도의 지원대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방식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 방식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보육료 지원제도의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각종 민원과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음.
- 본래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조사는 이미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전산자료의 미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조회자료가 불확실하여 일부소득 및 재산항목, 생활실태, 동거가족 여부 등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자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었음.
- 그러나 보육료 전액지원 및 부분지원의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

졌음에도 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방식은 우리나라 복지 정책 중, 가장 선별적이고 엄격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었음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효율적인 선정방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였음.

- 특히 보육료 신청에 있어 신청가구에서 제출 및 확인해야할 서류가 많았고, 확인조사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일선 지자체 보육관련 업무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신청기간에 일시적인 민원과 확인조사의 집중으로 자산조사 관련 업무 부담을 초래하였음.
- 이 같은 문제점은 자산조사방식과 관련된 원칙 또는 지침과 이를 적용하는 일선 지자체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에서 기인한 선정 방식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보편성을 강조하는 보육료 지원제도로의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우선적으로 견지하면서 선정방식이 지닌 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인에 대한 개선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그러므로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 선정방식 자산조사 가운데 추정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의 제외,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과 관련된 환산율은 현행 1/3만 반영하고 있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기초노령연금 수준과 유사하게 보다 완화해야함.

□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기준 확대의 주요내용

- 2009년 7월 이후(1차 개편), 전체 영유아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까지 차등보육료 전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의 가구규모 및 분위별 선정기준액을 도출하였음.
-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에서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선정기준 및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으나, 2009년 7월 이후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 분위별 선정기준액에 따라 보육료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음.

- 전체 영유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관련 행정자료를 기초로 모의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2009년 7월 이후부터는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하위 50%이하의 선정기준 258만원, 소득인정액 하위 50~60%의 선정기준은 339만원, 소득인정액 하위 60~70%의 선정기준은 43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선정기준 구분	지원 비율	2009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09년 7월 이후) (단위: 만원/월)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전액 (100%)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50~60% 이하	부분 (60%)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60~70% 이하	부분 (30%)	378	436	488	534
소득하위 70% 초과	정부미지원시설이용 0~2세 아동 => 기본보육료 지원				

주: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선정기준 30만원 상향 조정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의 주요내용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체계의 간소화 및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를 의미하는 보장단위와 소득인정액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 포함여부, 조사원칙 및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였음.
- 주요 개편사항은 보장단위(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개편,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조사,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 조회 실시,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재산유형 분류기준 완화, 그리고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폐지 등이었음.
 - 보장단위(조사대상 가구원 범위)는 조부모 동거사실의 확인불가에 따른 편법이 성행하며, 아동양육의 책임을 부모로 한정하기 위해 기존에 영유아 기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

제자매에서 영유아 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로 변경함.

- 소득 및 재산조사 원칙 및 조사방법은 소득증명서류 제출 없이 공적행정자료 중심의 조사수행과 복수의 행정자료 존재시 적용 우선순위 사전 설정으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보수월액→국민연금보수월액→국세청종합소득→기타자료 순으로 활용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 사적이전소득과 추정소득의 경우, 실질적인 확인이 곤란한 점, 전 업주부 등 추정소득에 대한 각종 민원 발생, 그리고 정확한 추정소득 계산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폐지하기로 함.
- 자동차의 일반재산·승용차 분류기준인 배기량 2000cc를 경계로 적용되는 소득환산을 관련 각종 민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보편적 보육료 지원제도 지향의 정책취지와 목표를 반영하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을 2500cc로 완화하고, 3자녀 이상의 가구는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 부동산 재산가액 산정방식은 재산가액 평가기준 및 확인절차 간 소화를 위해 기존 시가 파악 후 적용하였던 것에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 정확한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결과의 반영으로 대상 선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를 실시하기로 함.

3. 보육료 지원대상 2차 확대 개편(2011년 3월) 이후 선정체계

□ 2011년 3월 이후(2차개편) 주요 확대 내용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선정방식 개편에 따라 보육료 지원체계는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보편적 제도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위상을 제고하였음.
- 그러나, 전액지원 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하위 50%는 단계적

으로 확대되어야 하므로 2011년 3월 이후에는 전액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확대됨.

- 2011년 3월 이후부터는 만 0~4세아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확대 적용하여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 또한 정부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0~2세의 모든 영유아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보육료 지원을 받음으로써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선정기준 구분	지원 비율	2011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11년 3월 이후) (단위: 만원/월)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전액 (100%)	416	480	537	588
소득인정액 하위 70% 초과	정부미지원시설이용 0~2세 아동 => 기본보육료 지원				

주: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선정기준 30만원 상향 조정

- 2011년 3월 이후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에서는 보육서비스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그 지원의 범위가 확대됨.
 -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처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통해 가구규모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실질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이에 2010년에는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2011년 3월 이후 이를 더 확대하여 부부합산소득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70%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됨.

4.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변화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 기존 보육료 지원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1층), 차상위계층(2층)에 보육료 전액지원을 하였으며,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50%이하(3층)가구, 50~70%(4층)가구, 70~100%(5층) 가구에 보육료 부분지원으로 각각 80%, 60%, 30%를 지원하였음

□ 2009년 7월 이후(1차 개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보육료 지원수준은 기존에 '100%-100%-80%-60%-30%(5층구조)'에서 2009년 7월 이후 '100%-60%-30%(3층구조)'로 조정되었음.
-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았음
- 전액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기존에 차상위계층(약 159만원)에서 소득인정액 50%의 25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이는 선정방식의 개편 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정기준의 확대는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의 3층과 4층 사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액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전액지원 뿐만 아니라 부분지원 대상 선정기준 역시 크게 상향 조정
 -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의 4층에 해당하는 60% 지원계층의 경우, 213~298만원에서 258~339만원으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 상한선으로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 5층에 해당하는 30% 지원계층 선정기준은 298~427만원에서 339~436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 2011년 3월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변동

- 개편에 따라 보육료 지원계층은 5층(기존)에서 3층(1차개편), 그리고 2011년 3월 이후(2차 개편)부터는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됨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이하 까지 확대하고,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수준은 4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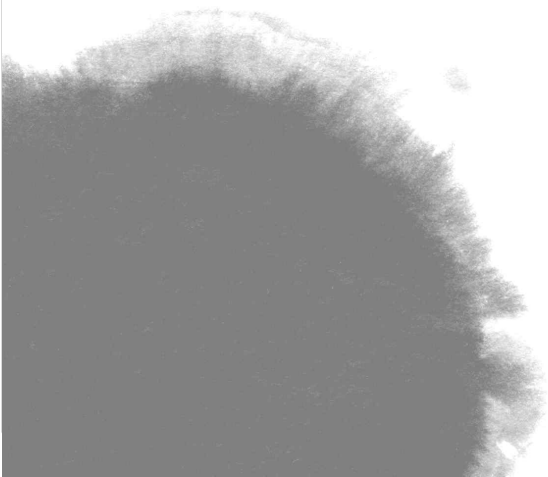
기준으로 2010년에 436만원에서 2011년 3월부터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변화 추이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2011년 2차 개편 (2011년 3월 이후)	정부지원 (100%)			
기본보육료 (0~2세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지원)				
4인가구 선정기준 (지원수준)	480 (100%)			
↑				
2009년 1차 개편 (2009년 7월 이후)	정부지원 1~3층 (100%)	4층 (60%)	부모 부담 5층 (30%)	
기본보육료 (0~2세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지원)				
4인가구 선정기준 (지원수준)	258 (100%)	339 (60%)	436 (30%)	
↑				
2009년 개편 전 (2009년 7월 이전)	정부지원 1~2층 (100%)	3층 (80%)	4층 (60%)	부모 부담 5층 (30%)
기본보육료 (0~2세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지원)				
4인가구 선정기준 (지원수준)	159 (100%)	213 (80%)	298 (60%)	427 (30%)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 관련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초분석



제3장

선정기준 조정 관련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초분석

제1 절 분석 DB: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

1. 분석 DB 추출

□ 분석목적

-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연령의 영유아가 1인 이상 있는 전 가구의 가구원 정보를 추출하고, 영유아의 부모를 중심으로 해당 가구원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소득 및 재산자료를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에서 추출하여 2011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선정기준액 조정안 도출 및 수급규모 변동 예측

□ 분석자료 : 건강보험 DB

- 2010. 11(자료추출 시점) 현재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중 보육료 지원대상인 ‘만 0세 ~ 6세 영유아 (☞ ’05. 1.1 이후 출생한 영유아 전체)’ 2,643,11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기준으로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전체 가구원 정보를 추출하여 개인별 소득 및 재산항목별 자료를 구축하여 영유아 가구 DB로 전환
- 영유아 및 부모 DB 변환 시, 개인 DB에 포함된 변수 중 주민등록 기준 행정전산망에 등록된 세대주와의 관계만을 기준으로 변환해야 하므로 이러한 한계 내에서 최대한 추출 가능한 방식 DB 구축

- 구축된 DB 내에서 추출 가능한 방법(☞ 행정전산망 세대주와의 관계 기준)으로 선정 시 자산조사대상(보장단위)인 ‘영유아, 부모, 영유아 이외 자녀’ 로 구성된 DB를 구축하여 분석
- 분석대상 영유아의 세대주와의 관계 분포
 - 분석 DB 구축을 위해 추출된 전체 영유아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세대주이면서 세대주의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손자녀와 외손자녀인 영유아를 포함하면 전체 영유아(2,643,110명)중 98.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추출 가능한 ‘영유아-부모’ 관계
 - ☞ 05(자) - ‘01(세대주) & 02(처)’ or ‘01(세대주) & 07(남편)’
 - ☞ 40(손) - ‘05(자) & 06(자부)’
 - ☞ 76(외손) - ‘05(자) & 08(사위)’
 - 추출 제외된 영유아 - 조카(0.53%), 동거인(0.28%) 등
 - 가구변환 과정에서 ‘손’, ‘외손’의 경우, 부모가 복수인 가구 제외

2. 영유아 가구 DB 구축

- 건강보험 공적 행정자료로부터 앞서 추출된 전체 영유아 및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개인 DB 기준으로, 이를 변환하여 영유아 및 영유아의 부모를 중심으로 가구 DB 구축
 - 2010.11(자료추출 시점)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공적 행정자료 중에서 보육료 지원대상인 ‘만 0세 ~ 5세 영유아(’05.1.1 이후 출생 영유아)’를 중심으로 추출
 - 영유아 & 부모 기준 DB 변환
 - 가구 ID 기준으로 최초 변환된 영유아 & 부모 DB로부터 영유아 1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영유아 4인 이상인 가구(아동시설 추정) 등을 제외하고 가구규모를 2~9인으로 제한하여 분석 DB 구축

- 영유아 1인 단독가구 제외 : 데이터 추출 오류 또는 세대 분리
이후 타 가구 편입 사례 추정
- 세대주 없는 가구 및 세대주 확인 시 2인으로 확인된 가구 제외
 - 데이터 추출 시 오류(행정전산망의 세대주와의 관계 오류) 또는 특수한 형태 세대합가 가구 추정
- 세대주 연령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세대주 가구 제외
 - 소년소녀가장 세대 또는 행정전산망 세대주와의 관계 오류 추정
- 가구원수 기준 - 10인 이상 가구 제외
 - 아동복지시설 또는 특수 형태의 대가족 추정
- 가구별 소득인정액 산출 시 지역별 기초공제액 반영에 필요한 시도
(행정구역) 코드가 누락된 가구 제외

□ 최종 영유아 가구 분석 DB 구성 및 기초통계

○ 분석대상 가구 : 1,988,876가구 (2009년 분석대상 2,030,573가구)

• 가구규모별 분포 : 평균 가구원수 3.53명

가구규모	가구수(가구)	비율
2인	172,664	8.7%
3인	803,337	40.4%
4인	819,527	41.2%
5인	175,587	8.8%
6인 이상	17,761	0.9%
전체	1,988,876	100.0%

• 영유아 & 부모 DB 기준 영유아 연령별 구성여부

구분	0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	1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	2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	3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	4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	5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
비율	17.0%	20.9%	22.1%	23.4%	21.4%	20.7%

- 영유아수 기준 : 1인 74.1% / 2인 24.7% / 3인 이상 가구 1.2%
(평균 영유아 수 1.27명)
- 총 자녀수 (0~20세,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 기준 : 1인 43.7% /
2인 45.3% / 3인 이상 11.0% (평균 1.69명)

- 배우자 유무(전체 가구) : 부부 84.6% / 부자 7.6% / 모자 7.8%
- 소득 유형(전 가구 대비) : 부_근로 56.1% / 부_사업 6.6% / 부_근로 & 사업 3.0% / 부_소득 없음 34.3% / 모_근로 22.7% / 모_사업 4.1% / 모_근로 & 사업 0.7% / 모_소득 없음 72.5%
- 소득 구성(전 가구 대비) : 맞벌이 18.8% / 부_홀벌이 46.9% / 모_홀벌이 8.7% / 소득 없음 25.6%
- 부부 가구(84.6%) 중 소득 구성 : 맞벌이 18.8% / 홀벌이_부 42.2% / 홀벌이_모 5.9% / 소득 없음 17.7%

○ 분석대상 영유아 : 2,528,655명 (2009년 분석대상 2,577,243명)

- 가구변환 과정에서, ‘손’, ‘외손’ 경우 부모가 복수인 가구 제외로 인해 추출된 영유아 규모는 전체 영유아의 95.7%를 차지함
- 분석대상 영유아의 성별 분포

구 분	영유아 (명)	비율
전체	2,528,655	100.0%
남	1,305,004	51.6%
여	1,223,651	48.4%

- 분석대상 영유아의 연령별 분포 : 출생아동 수가 급격히 증가했던 2007년생(3세) 영유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구분	영유아 (명)	비율
전체	2,528,655	100.0%
0세 (2010년 1~10월생)	341,850	13.5%
1세 (2009년생)	422,338	16.7%
2세 (2008년생)	445,160	17.6%
3세 (2007년생)	472,572	18.7%
4세 (2006년생)	429,688	17.0%
5세 (2005년생)	417,047	16.5%

3. 분석 DB 구축 시 포함된 소득 및 재산 관련 변수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모의분석 시, 소득인정액 산출에 포함된 소득 및 재산항목과 분석 DB에 제공된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의 소득 및 재산항목은 아래와 같음

종류	소득 및 재산 항목	건강보험 DB			비고
		제공된 항목	원자료 제공	기준 시점	
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원/연간)	국세청	'09	소득금액
	사업소득 (종합소득자)	사업소득(원/연간)			소득금액
	임대소득 (종합소득자)	임대소득(원/연간)			소득금액
	이자소득 (종합소득자)	이자소득(원/연간)			총 수입금액
	배당소득 (종합소득자)	배당소득(원/연간)			총 수입금액
	기타소득 (종합소득자)	기타소득(원/연간)			소득금액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연금급여액(원/연간)	각 연금공단	'10.11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근로소득 (근로자)	건강보험보수월액(원/월)	건강보험공단	'10.11	직장가입자만 해당
	기타 공적이전소득	-			
재산	일반재산(건축물)	건물(원/과세표준액)	해당 지자체	'10.6	과세표준액÷0.7=시가표준액
	일반재산(주택)	주택(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0.6=시가표준액
	일반재산(토지)	토지(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0.7=시가표준액
	일반재산(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
	자동차	자동차 연간세액(원/연간)			자동차가액 자료 확보불가
		자동차 자료건수			자동차 소득환산액의 대리변수로 활용
	전월세보증금	-			
	금융재산	-			
	골프장회원권	-			
	부동산 취득 권리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부채	부 채	-			

□ 건강보험공단이 연계 및 보유하고 있는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일부 누락 항목을 제외하고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모의분석 시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분석 DB 원자료 활용

－ 소득평가액 =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 월평균 공적연금 급여액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재산의 소득환산월액 =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기초공제액) × 환산율 } + 자동차 연간세액¹⁾] ÷ 12

• 시가표준액 환산 : 과세표준액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비율 기준 역산

• 주택 : 지방세법 상 2010년 재산항목별 과세표준 적용비율 60% 기준 (과세표준액 ÷ 0.6)

• 토지 및 건축물 : 지방세법 상 2010년 재산항목별 과세표준 적용 비율 70% 기준 (과세표준액 ÷ 0.7)

• 선박/항공기 :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 건강보험 공적 행정자료에 기초하여 구축된 영유아 가구 분석 DB 한계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및 2010년부터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공적 행정자료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소득인정액 산출) 시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항목 가운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과 신청 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재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임차보증금, 자동차가액, 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누락된 소득 및 재산항목에 대한 보정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은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모의분석 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임

1) 자동차가액에 환산율을 적용하여 환산해야 하나, 자동차가액 원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연간 자동차세액 자료를 대리변수로 사용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한 영유아 & 부모 DB를 기초로 보육료 지원대상인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관련 기초통계를 분석함
- 소득 및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기초분석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개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 월평균 공적연금
급여액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기초공제액)
× 환산율] + 자동차 연간세액 / 12

47

1. 영유아 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소득항목별 보유실태

- 먼저,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상 보장단위(자산조사 대상 범위)인 영유아 및 부모 중심으로 구축한 DB를 기초로 소득평가액 및 소득항목별 보유실태와 평균을 분석함
- 특히,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을 위한 선정기준 도출 당시 분석되었던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와의 비교를 통해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분석 DB 상의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를 살펴봄

□ 영유아 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소득항목별 보유실태 비교

구분		이자소득 (연간)	배당소득 (연간)	임대소득 (연간)	사업소득 (연간)	기타소득 (연간)
2009년 확대 개편안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53	126	146	2,225	58
	보유 비율 (단위: %)	0.1	0.1	1.3	15.1	2.0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49,647	125,363	11,254	14,749	2,933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41	92	167	2,250	28
	보유 비율 (단위: %)	0.1	0.1	1.2	13.8	0.8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63,765	148,681	14,212	16,366	3,380

구분		국세청 종합소득 (연간)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공적연금 월평균 급여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소득 평가액
2009년 확대 개편안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625	219	0.6	2,249	2,469
	보유 비율 (단위: %)	17.9	17.9	0.2	64.6	73.2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4,684	1,224	307	3,480	3,374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578	215	0.8	2,477	2,692
	보유 비율 (단위: %)	15.0	15.0	0.3	67.0	74.8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7,132	1,428	300	3,697	3,599

-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분석 DB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소득항목별 보유실태를 살펴보면, 국세청 종합소득의 보유비율은 15%였으며, 전체 평균은 연간 약 258만원이었으나 보유 가구의 평균은 연간 약 1,713만원으로 월 약 143만원에 해당함

- 국세청의 종합소득 항목 중 소득자료의 보유비율은 사업소득이 13.8%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임대소득(1.2%)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유형은 1% 이내로 매우 낮았으며, 이러한 국세청 종합소득 보유비율은 2009년 7월 개편방안 도출 당시 분석 DB보다 다소 낮아진 결과임
- 그러나, 각 항목별 보유가구 평균은 공통적으로 2009년 선정기준 도출 당시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준이었음
- 한편,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자료인 건강보험보수월액의 보유가구 비율은 67%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2009년(64.6%)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전체 가구의 평균은 약 248만원이었으며, 보유가구의 평균은 약 370만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업소득을 포함한 국세청 종합 소득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공적연금 보유비율은 영유아 및 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분석 DB라는 특성에 따라서 보유가구 비율이 0.3%에 불과하였으며, 보유가구의 월평균 공적연금 급여액은 약 30만원 수준임
- 소득항목을 모두 합산한 소득평가액 자료를 보유한 영유아 가구의 비율은 약 74.8%로, 2009년 당시보다 1.6%p 높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약 1/4은 공적 행정자료에 의한 소득평가액이 0인 것으로 분석됨
 -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평가액 평균값은 약 270만원이었으며, 보유가구의 평균은 약 360만원으로 2009년(약 337만원)에 비해 약 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 영유아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 다음으로 영유아 가구 DB의 재산항목별 보유실태와 이를 기초로 산출 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평균을 2009년과 비교 분석함

- 개별 재산항목별 평균 및 보유실태 분석,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시 기초공제 및 환산을 적용 전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분석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시에 적용되는 기초공제액은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에서 적용되는 수준을 반영하였으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도는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동일함
 -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에 적용 중인 기초공제액 수준은 선별적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보육료 지원제도와 유사하게 준 보편적 성격을 지닌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초공제액 수준의 1/2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5,400	3,400	2,900

주: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역시,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에 적용되는 수준(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1/3, 일반재산의 경우 월 1.39%, 연 16.68%)을 동일하게 적용함
 -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선별적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3 수준이나, 준 보편적 제도인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에서 적용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보다는 약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액	월 4.17% / 3	월 6.26% / 3	월 4.17% / 3 또는 월 100% / 3

- 이러한 방법에 의해 산출된 개별 영유아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등 기초통계를 살펴봄

□ 영유아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비교

구분		주택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건물 시가표준액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2009년 확대 개편안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67,326	18,786	4,828	4	90,944
	보유 비율 (단위: %)	44.2	15.4	5.2	0.1	50.3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52,408	122,189	92,434	6,556	180,737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78,108	18,914	4,702	4	101,739
	보유 비율 (단위: %)	48.9	16.9	5.2	0.1	55.0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59,611	112,170	91,840	4,817	185,002

구분		기초공제 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기초공제 후 일반재산 연 16.68% 기준 소득환산액	기초공제 후 연 16.68% 기준 연간 소득환산액	기초공제 후 연 16.68% 기준 소득환산월액
2009년 확대 개편안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71,023	11,847	12,320	1,027
	보유 비율 (단위: %)	42.1	42.1	76.4	76.4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68,564	28,116	16,119	1,343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79,961	13,338	13,861	1,155
	보유 비율 (단위: %)	47.0	47.0	86.8	86.8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70,273	28,402	15,964	1,330

- 먼저, 영유아 가구의 재산항목별 보유실태를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보유비율은 약 48.9%로 2009년 당시 44.2%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토지와 건물은 각각 16.9%와 5.2%로 나타남

-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주택 보유가구 평균은 약 1억 6천만원으로 2009년(약 1억 5,200만원)에 비하여 소폭 상승하였으며, 토지와 건물은 다소 낮아졌음
- 주택, 토지, 건물 및 선박항공기를 합산한 일반재산의 보유비율은 55%로 2009년 50.3%에 비해 약 4.7%p 증가하였으며,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의 전체 평균은 약 1억 200만원, 보유가구 평균은 약 1억 8,500만원으로 2009년(약 1억 8,100만원)에 비해 약 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별 기초공제액 적용 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보유가구 비율은 47%로 나타나, 약 8%의 가구가 기초공제액에 의해 재산가액이 모두 공제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기초공제 후 재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에 대한 소득환산액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연간 자동차세액을 반영한 이후 연간 16.68% (월 4.17%의 1/3인 1.39%)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간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평균은 약 1,386만원이며, 이를 보유한 영유아 가구(86.8%)의 평균은 연간 약 1,596만원으로 나타남
-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재산의 소득환산월액 전체 평균은 약 116만원이었으며, 보유가구의 평균은 약 133만원으로 분석됨

3.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유실태

-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동시에 합산하여 산출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유실태 및 평균은 아래 표와 같음
- 가구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모의분석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가구 균등화지수(PL, RT)를 반영한 소득인정액 보유실태 및 평균을 각각 살펴봄

□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유실태 비교

구분		연 16.68% 기준 소득인정액	연 16.68% 기준 PL 균등조정 소득인정액	연 16.68% 기준 RT 균등조정 소득인정액
2009년 확대 개편안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3,495	1,407	1,852
	보유 비율 (단위: %)	84.9	84.9	84.9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4,115	1,656	2,180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분석 DB	전체 평균 (단위: 천원)	3,847	1,559	2,048
	보유 비율 (단위: %)	93.5	93.5	93.5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4,116	1,668	2,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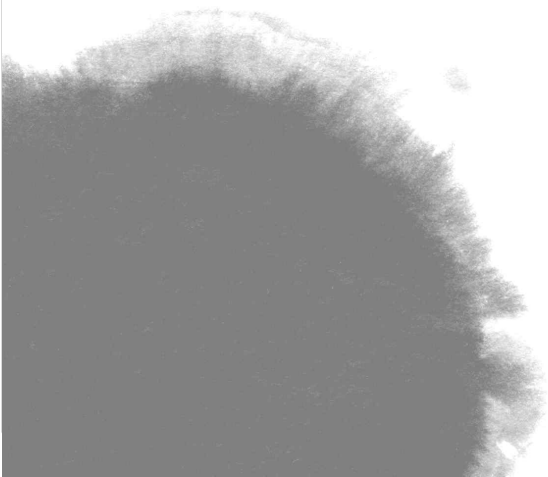
— 먼저, 가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 값이 0이 아닌 가구, 즉 소득 또는 재산 중 어떠한 값이라도 가지고 있는 영유아 가구 비율이 93.5%로 나타나 2009년 당시 84.9%에 비해 약 8.6%p 상승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공적자료에 의한 소득파악률이 제고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소득 및 재산 중 어떠한 항목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영유아 가구는 6.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임
-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약 385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인정액이 0인 가구를 제외한 보유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약 412만원으로 나타남
- 전체 평균은 2009년 약 350만원에 비해 10% 가량 상승하였으며,

보유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2009년 당시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모의분석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두 가지 유형(PL/RT)의 가구 균등화지수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의 전체 평균은 각각 약 156만원과 205만원으로 나타났음
 - 가구 균등화지수에 의해서 균등하게 조정된 소득인정액을 보유한 가구의 평균은 현행 최저생계비의 PL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 시 약 167만원,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시 반영된 RT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 시 약 219만원으로 분석됨
-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기초로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



제4장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제1 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및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추정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선정기준 모의분석 방법

- 영유아와 부모로 구성된 분석 DB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항목별 공적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후,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경계 및 분포를 모의 분석함
- 모의분석을 위한 개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 월평균 공적연금
급여액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text{기초공제액}) \times \text{환산율}] + \text{자동차 연간세액} / 12$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소득인정액 분포 정책
 모의분석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공적 행정자료의 소득
 및 재산항목

종류	소득 및 재산 항목	건강보험 DB			비고
		제공된 항목	원자료 제공	기준 시점	
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원/연간)	국세청	'09	소득금액
	사업소득 (종합소득자)	사업소득(원/연간)			소득금액
	임대소득 (종합소득자)	임대소득(원/연간)			소득금액
	이자소득 (종합소득자)	이자소득(원/연간)			총 수입금액
	배당소득 (종합소득자)	배당소득(원/연간)			총 수입금액
	기타소득 (종합소득자)	기타소득(원/연간)			소득금액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연금급여액(원/연간)	각 연금공단	'10.11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근로소득 (근로자)	건강보험보수월액(원/월)	건강보험공단	'10.11	직장가입자만 해당
	기타 공적이전소득	-			
재산	일반재산(건축물)	건물(원/과세표준액)	해당 지자체	'10.6	과세표준액÷0.7=시가표준액
	일반재산(주택)	주택(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0.6=시가표준액
	일반재산(토지)	토지(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0.7=시가표준액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 (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
	자동차	자동차 연간세액 (원/연간)			자동차가액 자료 확보불가 자동차 소득환산액의 대리변수로 활용
		자동차 자료건수			
	전월세보증금	-			
	금융재산	-			
	골프장회원권	-			
	부동산 취득 권리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부채	부 채	-			

□ 2009년 개편 시 선정기준 도출과정과 일관성을 유지한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모형

－ 2009년 당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관련 주요 쟁점별 비교를 통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추정하였음

- 자산조사 대상인 보장단위의 경우, 2009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및 부모를 기준으로 모의 분석을 실시함
- 기초공제액 적용여부의 경우, 지역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초공제액 수준을 현행과 같이 적용하는 방안으로 분석함
-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경우 기초공제액과 반대로 다소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3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모의분석을 실시함
- 각 모형별로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현행 최저생계비와 같은 PL 균등화 지수 /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체계에서 반영된 OECD 기준 RT 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경우를 모두 분석하였으나, 최종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시에 2009년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RT 균등화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함

○ 모의 분석모형

- － (보장단위) 영유아 및 부모 DB 기준
- － (기초공제액) 현행 보육료 지원 기초공제액 적용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 (재산의 소득환산율) 현행 보육료 지원 환산율 적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율의 1/3 적용
 - 일반재산의 경우 월 4.17%의 1/3인 월 1.39%(연 16.68%)
- － 가구균등화 지수
 -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2.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소득인정액 분포

□ 균등화지수 적용여부에 따른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모의분석 결과

구분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보장단위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분석가구수	1,988,876	1,988,876	1,988,876
평균(천원)	3,847	1,558	2,047
중위(천원)	2,718	1,115	1,465
최빈(천원)	0	0	0
표준편차	13,540	6,017	7,685
5%	0	0	0
10%	19	8	11
15%	55	23	30
20%	241	98	130
25%	835	329	440
30%	1,224	500	658
35%	1,621	665	875
40%	2,000	818	1,077
45%	2,358	966	1,272
50%	2,718	1,115	1,465
55%	3,093	1,268	1,666
60%	3,493	1,434	1,883
65%	3,952	1,619	2,124
70%	4,482	1,831	2,403
75%	5,098	2,079	2,727
80%	5,858	2,380	3,125
85%	6,834	2,772	3,635
90%	8,269	3,345	4,385
95%	11,038	4,452	5,840

- 영유아와 부모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 평균 소득인정액은 3,847천원이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분포 상에서 보육료 전액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 하위 70% 선정기준은 4,482천원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분포는 영유아 가구의 가구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구 균등화지수에 의해 균등하게 조정된 소득인정액 분포로부터 선정기준을 도출해야 함
- 현행 최저생계비 계측 시 가구 균등화지수로 활용되고 있는 OECD PL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모의 분석한 균등조정 소득인정액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PL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의 평균과 중위값(기준 전액지원 대상인 소득인정액 하위 50%)은 각각 1,558천원과 1,115천원인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인정액 하위 70%는 1,831천원으로 분석됨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당시 선정기준의 도출에 활용되었으며, 상대빈곤율이나 지니계수 등의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OECD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모의 분석한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의 평균과 중위값(기준 전액지원 대상인 소득인정액 하위 50%)은 각각 2,047천원과 1,465천원이었음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인정액 하위 70%는 2,403천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구 균등화지수에 의해 이를 다시 환산하여 가구규모별로 제시하게 됨

3.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 － 영유아 & 부모 DB 대상으로 2009년 7월 개편된 선정방식에 따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개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
 - 현행 지역별 기초공제액(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16.68%, 월 1.39%) 적용을 통해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 건강보험 DB의 특성 및 한계 내에서 사전 고려될 수 있는 공적 행정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선정기준 재조정 시 금융재산, 전월세보증금, 부채 등에 대한 보정방안 검토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재산가액 산정 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 및 보정률(주택 0.9, 건축물 0.9, 토지 지역별 적용률), 선박·항공기 보정계수(3.5)를 반영함
- － 2009년 확대 개편 시 다양한 검토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 바 있는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반영하여 균등하게 조정된 소득인정액 분포로부터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도출

○ <참고> RT 가구 균등화지수 (OECD 상대빈곤 분석 가구 균등화지수)

가구원수	1	2	3	4	5	6
4인가구 기준	0.500	0.707	0.866	1.000	1.118	1.225
1인가구 기준	1.000	1.414	1.732	2.000	2.236	2.449

○ <참고> PL 가구 균등화지수 (현행 최저생계비 적용 가구 균등화지수)

가구원수	1	2	3	4	5	6
4인가구 기준	0.370	0.630	0.815	1.000	1.185	1.370
1인가구 기준	1.000	1.700	2.200	2.700	3.200	3.700

□ 보육료 선정기준 도출경과

- － 영유아 & 부모 기준 DB를 기초로 2009년 7월 개편된 선정방식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며 개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
- － 다양한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을 검토하여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 (1차 분석) 현행 지역별 기초공제액(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및 환산율(연 16.68%, 월 1.39%) 적용
 - (2차 분석) 지역별 기초공제액 2배 확대(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동일 수준, 대도시 10,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적용 및 현행 환산율(연 16.68%, 월 1.39%) 적용
 - (3차 분석) 현행 지역별 기초공제액(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및 환산율(연 16.68%, 월 1.39%) 적용하되, 일반재산가액 산정 시 토지를 제외한 주택·건축물만 보정률(0.9) 적용
 - (4차 분석) 2009년 선정기준 도출 당시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DB에 구축된 연간 자동차세액을 활용하여 자동차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대리변수로 보정 사용하여,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을 일반 재산가액 산정방식에 따라 도출
- －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 개편 당시 적용된 OECD 가구균등화 지수(RT)에 의하여 균등 조정된 소득인정액 분포로부터 전체 영유아 가구의 하위 70% 선정기준 조정안을 도출
 - 균등화지수에 의하여 ‘균등하게 조정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하위 70% 선정기준 조정안을 우선 도출한 후, 이를 가구규모별 보육료 선정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

□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최종 분석결과

- － RT 가구균등화 지수,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기초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을 적용 시 영유아 가구 분위별 소득인정액 분포

분위별 소득인정액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4인가구)			
	(1안) 시가표준액 기준	(2안) 토지만 보정률 적용	(3안) 주택·건축물만 보정률 적용	(4안) 전체 보정률 적용
하위 10%	22,000	22,000	22,000	22,000
하위 20%	260,000	266,000	298,000	308,000
하위 30%	1,316,000	1,326,000	1,372,000	1,384,000
하위 40%	2,154,000	2,166,000	2,212,000	2,222,000
하위 50%	2,930,000	2,942,000	3,000,000	3,010,000
하위 60%	3,766,000	3,780,000	3,858,000	3,872,000
하위 70%	4,806,000	4,826,000	4,940,000	4,962,000
하위 80%	6,250,000	6,280,000	6,444,000	6,474,000
하위 90%	8,770,000	8,828,000	9,084,000	9,144,000

- － 2011년 가구규모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 1안

(1안) 시가표준액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하위 70%	4,162,118	4,806,000	5,373,271	5,886,124
(2안) 시가표준액 & 보정률(토지)	3인 이하	4인	5인	6인
하위 70%	4,179,439	4,826,000	5,395,632	5,910,619
(3안) 시가표준액 & 보정률(주택·건축물)	3인 이하	4인	5인	6인
하위 70%	4,278,165	4,940,000	5,523,088	6,050,240
(4안) 시가표준액 & 보정률(전체)	3인 이하	4인	5인	6인
하위 70%	4,297,218	4,962,000	5,547,685	6,077,184

□ 2009년 7월 개편 이후 선정기준 및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비교

－ 2009년 7월 ~ 2010년 선정기준

- 보장단위 : 영유아 및 부모 기준
- RT 가구균등화 지수
- 일반재산가액 시가표준액 기준

지원 대상	선정기준 구분	지원 비율	2009년 선정기준(안) (단위: 만원)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층	전체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50%	전액 (100%)	224	258	289	316
2층	전체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50~60%	부분 (60%)	294	339	379	415
3층	전체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60~70%	부분 (30%)	378	436	488	534

주: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선정기준 30만원 상향 조정

－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 보장단위 : 영유아 및 부모 기준
- RT 가구균등화 지수
- 일반재산가액 시가표준액 기준

선정기준 구분	지원 비율	2011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11년 3월 이후) (단위: 만원/월)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전액 (100%)	416	480	537	588
소득인정액 하위 70% 초과	정부미지원시설이용 0~2세 아동 => 기본보육료 지원				

주: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선정기준 30만원 상향 조정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변화 추이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2011년 2차 개편 (2011년 3월 이후)	정부지원 (100%)	
	기본보육료 (0~2세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지원)	
4인가구 선정기준 (지원수준)		480 (100%)



2009년 1차 개편 (2009년 7월 이후)	정부지원 1~3층 (100%)	4층 (60%)	부모 부담 5층 (30%)
	기본보육료 (0~2세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지원)		
4인가구 선정기준 (지원수준)	258 (100%)	339 (60%)	436 (30%)



2009년 개편 전 (2009년 7월 이전)	정부지원 1~2층 (100%)	3층 (80%)	4층 (60%)	부모 부담 5층 (30%)
	기본보육료 (0~2세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지원)			
4인가구 선정기준 (지원수준)	159 (100%)	213 (80%)	298 (60%)	427 (30%)

○ <참고>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1차 분석결과

-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현행 환산율 적용

시가표준액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하위 70%	4,120,549	4,758,000	5,319,606	5,827,336
시가표준액 & 보정률(토지)	3인 이하	4인	5인	6인
하위 70%	4,137,869	4,778,000	5,341,966	5,851,831
시가표준액 & 보정률(전체)	3인 이하	4인	5인	6인
하위 70%	4,255,476	4,913,800	5,493,795	6,018,151

○ <참고>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2차 분석결과

- RT 가구균등화 지수 & 기초공제 2배 확대 & 현행 환산율 적용

시가표준액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하위 70%	3,827,832	4,420,000	4,941,710	5,413,372
시가표준액 & 보정률(토지)	3인 이하	4인	5인	6인
하위 70%	3,845,153	4,440,000	4,964,071	5,437,867
시가표준액 & 보정률(전체)	3인 이하	4인	5인	6인
하위 70%	3,945,612	4,556,000	5,093,763	5,579,938

○ <참고>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3차 분석결과

-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현행 기초공제액 및 환산율 적용

시가표준액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하위 70%	4,120,549	4,758,000	5,319,606	5,827,336
시가표준액 & 보정률(토지)	3인 이하	4인	5인	6인
하위 70%	4,137,869	4,778,000	5,341,966	5,851,831
시가표준액 & 보정률(주택·건축물)	3인 이하	4인	5인	6인
하위 70%	4,236,596	4,892,000	5,469,422	5,991,452
시가표준액 & 보정률(전체)	3인 이하	4인	5인	6인
하위 70%	4,255,476	4,913,800	5,493,795	6,018,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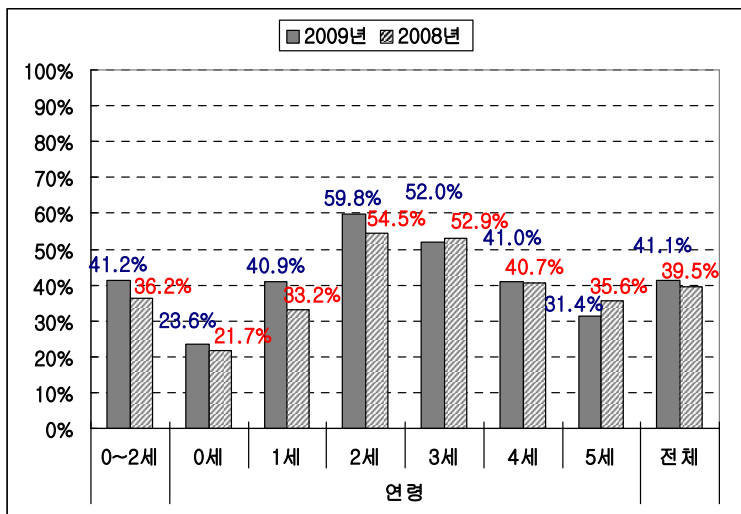
제2절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적용 시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추정

- 여기서는 앞서 다양한 분석방식에 따라 도출된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별 영유아 가구에 대해 모의 적용하여 분석결과를 살펴봄
 - 개별 영유아 가구에 대한 수급대상 선정여부 판별 결과에 따라 전체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의 규모를 추정함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5장에서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통한 선정기준 확대에 의한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음
 - 또한,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규모의 추정결과에 따라 보육료 지원 관련 예산규모를 추정함

1.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추정 관련 기초자료

- 앞서 도출된 선정기준 조정안을 적용하여 개별 영유아 가구별로 산출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모의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영유아 및 예산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 등 기초통계에 대한 검토 및 가정이 필요함
 -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변화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임
-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유아 규모 및 이에 따른 예산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 2011년 확대 개편 전까지는 보육료 지원대상이 소득계층에 따라 전액지원과 부분지원 등으로 지원수준이 구분되었으므로, 연령 및 계층별 보육시설 이용률 가정이 필요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모든 보육료 지원대상에 대해 전액지원(무상보육)이 실시되므로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에 대한 가정이 필요함
- － 여기서는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에 따른 수급변동 심층 분석결과와 보육통계에서 제시된 바 있는 2009년 말 기준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을 우선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과 2011년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 수준을 가정하여 이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를 분석함
- <참고>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전후의 보육시설 이용률 변화 분석결과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전후('08.12 vs. '09.12) 영유아 가구의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 변화



- 2009년 12월 기준 전체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약 41.1%로 2008년 12월 기준 보육시설 이용률(39.5%)에 비하여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약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러한 보육시설 이용률 변화는 연령별로 상이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0~2세 영아는 약 5.0%p 상승한 반면 3~5세의 경우 다소 낮아짐
 - 0~2세 영아의 경우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보육시설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1세의 경우 약 33.2%에서 약 40.9%로 약 7.7%p(23.2%) 상승하였으며, 0세와 2세 역시 각각 1.9%p와 5.3%p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2009년 3세와 4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각각 약 52.0%, 약 41.0%로 2008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5세의 경우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35.6%에서 31.4%로 약 4.2%p(11.8%) 감소한 바 있음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적용에 따른 영유아 규모 추정을 위해서 2011년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여 반영함
- 2009년 보육시설 이용률을 기초선으로 최근 3년간(2007~2009)의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연령별로 2011년 이용률을 추정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11년 보육시설 이용률	28.6%	45.3%	62.8%	59.3%	45.4%	31.5%

- 2011년 보육료 지원단가 가정 : 2010년 대비 3% 상향 조정
- 기본보육료 산출을 위한 정부지원시설 및 미지원시설 영유아 규모 가정
- 정부지원시설 : 미지원시설 = 26% : 74%
- 정부 미지원시설(민간, 가정 보육시설) 영아(0~2세)에 대해서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므로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 보육시설)과 정부 미지원시설을 구분해야 함
- 예산규모 추정 시 국고보조율 : 49.4%

2.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적용 시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추정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모의적용 시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규모 및 소요예산 분석결과

— 선정기준 조정안(4인 가구 기준 480만원)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모의적용 시 연령별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규모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12,028	316,934	325,237	343,910	305,383	294,439	1,897,931
	72.2%	71.3%	70.1%	69.8%	68.3%	67.7%	69.9%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89,240	143,571	204,249	203,938	138,644	92,748	872,391
	20.6%	32.3%	44.0%	41.4%	31.0%	21.3%	32.1%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 지원 대상	5세 전액 지원 대상	0~5세 전액 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 지원대상
				779,642	92,748	872,391	872,391

—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 반영 시 보육료지원 예산규모 추정

(국비 기준,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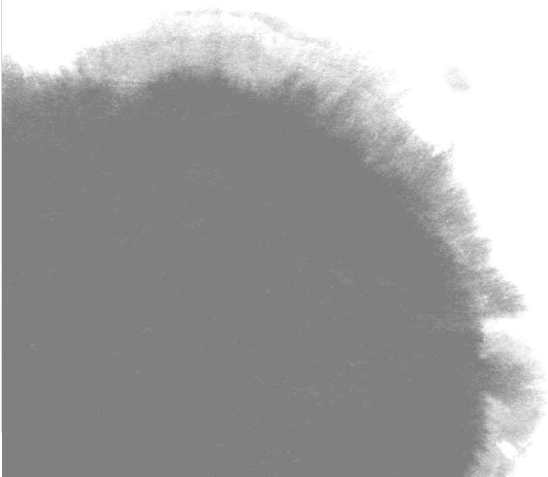
보육료 지원 예산 (전체)	0-4세 보육료 지원 (전체)	0-4세 70% 이하 보육료 지원 (전체)	0-4세 70% 이하 보육료 지원 (기본보육료 제외)	0-2세 70% 이하 정부 미지원시설 기본보육료	0-2세 70% 초과 정부 미지원시설 기본보육료	만 5세 보육료 지원 (전체)
1,840,133	1,742,266	1,598,597	1,241,951	356,646	143,669	97,867

○ <참고> 공적 행정자료 누락항목에 의한 소득인정액 예상 증가금액
(약 11만6천원) 반영 시 영유아 및 예산규모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07,324	312,206	320,622	339,048	301,055	290,378	1,870,634
	71.1%	70.2%	69.1%	68.8%	67.3%	66.8%	68.9%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87,895	141,430	201,351	201,055	136,679	91,469	859,878
	20.3%	31.8%	43.4%	40.8%	30.5%	21.0%	31.7%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 지원 대상	5세 전액 지원 대상	0~5세 전액 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 지원대상
				768,409	91,469	859,878	859,878

보육료 지원 예산 (전체)	0-4세 보육료 지원 (전체)	0-4세 70% 이하 보육료 지원 (전체)	0-4세 70% 이하 보육료 지원 (기본보육료 제외)	0-2세 70% 이하 정부 마지원시설 기본보육료	0-2세 70% 초과 정부 마지원시설 기본보육료	만 5세 보육료 지원 (전체)
1,820,773	1,724,256	1,575,320	1,223,941	351,378	148,936	96,517

중장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방안 관련 정책 모의분석



제5장

중장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방안 관련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 앞서 도출된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기초선으로 하여,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통한 선정기준 확대에 의한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함

제1 절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추가 확대방안 모의분석

- 선정기준 조정안에 따른 소득인정액 하위 80% 및 90% 선정기준
 - －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과 동일한 모의 분석방식으로 도출된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하위 80%, 90%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구원수	3인 이하	4인	5인	6인
70%	4,162,118 (416만원)	4,806,000 (480만원)	5,373,271 (537만원)	5,886,124 (588만원)
80%	5,412,659 (541만원)	6,250,000 (625만원)	6,987,712 (698만원)	7,654,655 (765만원)
90%	7,595,043 (759만원)	8,770,000 (877만원)	9,805,158 (980만원)	10,741,013 (1,074만원)

- － 이와 같은 선정기준을 모의 적용하여 향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의 규모를 전체 영유아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80%와 90%의 수준까지 확대하여 보편성을 더욱 강화할 경우 모의 분석함
 - 모의분석 과정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앞서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적용 시 영유아 대상 및 예산규모 분

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DB 공적 행정자료의 누락항목에 의한 소득인정액 예상증가액(11만6천원)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와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함

□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유지 시

○ 맞벌이가구 공제 미적용 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12,014	316,924	325,215	343,860	305,317	294,403	1,897,732
	72.2%	71.3%	70.0%	69.8%	68.2%	67.7%	69.9%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89,236	143,567	204,235	203,909	138,614	92,737	872,297
	20.6%	32.3%	44.0%	41.4%	31.0%	21.3%	32.1%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779,560	92,737	872,297	872,297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07,326	312,222	320,592	339,008	300,991	290,315	1,870,454
	71.1%	70.2%	69.1%	68.8%	67.3%	66.8%	68.9%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87,895	141,437	201,332	201,032	136,650	91,449	859,794
	20.3%	31.8%	43.4%	40.8%	30.5%	21.0%	31.7%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768,345	91,449	859,794	859,794

○ 근로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소득 25% 공제 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27,710	330,170	336,746	354,266	313,860	301,617	1,964,369
	75.8%	74.3%	72.5%	71.9%	70.1%	69.4%	72.3%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3,725	149,567	211,477	210,080	142,492	95,009	902,350
	21.7%	33.6%	45.5%	42.7%	31.8%	21.9%	33.2%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07,341	95,009	902,350	902,350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22,637	325,160	331,758	349,195	309,395	297,397	1,935,542
	74.7%	73.1%	71.5%	70.9%	69.1%	68.4%	71.3%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2,274	147,298	208,344	207,073	140,465	93,680	889,134
	21.4%	33.1%	44.9%	42.0%	31.4%	21.6%	32.7%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795,454	93,680	889,134	889,134

○ 근로사업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사업소득 25% 공제 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28,493	330,863	337,473	355,054	314,595	302,509	1,968,987
	76.0%	74.4%	72.7%	72.1%	70.3%	69.6%	72.5%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3,949	149,881	211,933	210,547	142,826	95,290	904,426
	21.7%	33.7%	45.6%	42.8%	31.9%	21.9%	33.3%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09,136	95,290	904,426	904,426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23,486	325,887	332,497	349,990	310,152	298,284	1,940,298
	74.9%	73.3%	71.6%	71.1%	69.3%	68.6%	71.5%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2,517	147,627	208,808	207,544	140,809	93,960	891,265
	21.4%	33.2%	45.0%	42.1%	31.5%	21.6%	32.8%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797,306	93,960	891,265	891,265

□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하위 80% 확대 시

○ 맞벌이가구 공제 미적용 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80% 전액(100%) 지원대상	355,802	361,504	371,249	391,827	349,056	336,728	2,166,166
	82.3%	81.3%	80.0%	79.6%	78.0%	77.5%	79.8%
하위 0-80% 이용예상 영유아	101,759	163,761	233,145	232,353	158,471	106,069	995,559
	23.3%	36.8%	50.2%	47.2%	35.4%	24.4%	36.7%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89,490	106,069	995,559	995,559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80% 전액(100%) 지원대상	352,656	358,416	368,009	388,564	346,122	333,789	2,147,557
	81.6%	80.6%	79.3%	78.9%	77.4%	76.8%	79.1%
하위 0-80% 이용예상 영유아	100,860	162,363	231,110	230,418	157,140	105,144	987,033
	23.3%	36.5%	49.8%	46.8%	35.1%	24.2%	36.3%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81,890	105,144	987,033	987,033

○ 근로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소득 25% 공제 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80% 전액(100%) 지원대상	371,221	375,174	383,870	403,540	358,908	345,331	2,238,044
	85.9%	84.4%	82.7%	81.9%	80.2%	79.4%	82.4%
하위 0-80% 이용예상 영유아	106,169	169,954	241,070	239,299	162,944	108,779	1,028,216
	24.6%	38.2%	51.9%	48.6%	36.4%	25.0%	37.9%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919,437	108,779	1,028,216	1,028,216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80% 전액(100%) 지원대상	368,411	372,253	380,640	400,351	355,925	342,361	2,219,941
	85.2%	83.7%	82.0%	81.3%	79.5%	78.8%	81.7%
하위 0-80% 이용예상 영유아	105,365	168,631	239,042	237,408	161,590	107,844	1,019,880
	24.4%	37.9%	51.5%	48.2%	36.1%	24.8%	37.6%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912,036	107,844	1,019,880	1,019,880

○ 근로사업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사업소득 25% 공제 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80% 전액(100%) 지원대상	371,768	375,617	384,420	404,125	359,531	345,967	2,241,428
	86.0%	84.5%	82.8%	82.1%	80.4%	79.6%	82.5%
하위 0-80% 이용예상 영유아	106,326	170,154	241,416	239,646	163,227	108,979	1,029,749
	24.6%	38.3%	52.0%	48.7%	36.5%	25.1%	37.9%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920,769	108,979	1,029,749	1,029,749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80% 전액(100%) 지원대상	368,991	372,719	381,216	400,966	356,547	343,004	2,223,443
	85.4%	83.8%	82.1%	81.4%	79.7%	78.9%	81.9%
하위 0-80% 이용예상 영유아	105,531	168,842	239,404	237,773	161,872	108,046	1,021,468
	24.4%	38.0%	51.6%	48.3%	36.2%	24.9%	37.6%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913,422	108,046	1,021,468	1,021,468

□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하위 90% 확대 시

○ 맞벌이가구 공제 미적용 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90% 전액(100%) 지원대상	396,596	404,410	417,294	440,358	395,170	382,028	2,435,856
	91.8%	91.0%	89.9%	89.4%	88.3%	87.9%	89.7%
하위 0-90% 이용예상 영유아	113,426	183,198	262,060	261,132	179,407	120,339	1,119,563
	26.2%	41.2%	56.4%	53.0%	40.1%	27.7%	41.2%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999,224	120,339	1,119,563	1,119,563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90% 전액(100%) 지원대상	395,300	402,971	415,755	438,723	393,710	380,564	2,427,023
	91.5%	90.7%	89.5%	89.1%	88.0%	87.5%	89.4%
하위 0-90% 이용예상 영유아	113,056	182,546	261,094	260,163	178,744	119,878	1,115,480
	26.2%	41.1%	56.2%	52.8%	39.9%	27.6%	41.1%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995,603	119,878	1,115,480	1,115,480

○ 근로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소득 25% 공제 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90% 전액(100%) 지원대상	404,787	412,757	425,918	448,825	402,990	389,110	2,484,386
	93.7%	92.9%	91.7%	91.1%	90.1%	89.5%	91.5%
하위 0-90% 이용예상 영유아	115,769	186,979	267,476	266,153	182,957	122,570	1,141,904
	26.8%	42.1%	57.6%	54.0%	40.9%	28.2%	42.0%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1,019,335	122,570	1,141,904	1,141,904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90% 전액(100%) 지원대상	403,851	411,631	424,630	447,438	401,625	387,774	2,476,950
	93.4%	92.6%	91.5%	90.9%	89.8%	89.2%	91.2%
하위 0-90% 이용예상 영유아	115,501	186,469	266,668	265,331	182,338	122,149	1,138,455
	26.7%	41.9%	57.4%	53.9%	40.8%	28.1%	41.9%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1,016,306	122,149	1,138,455	1,138,455

○ 근로사업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사업소득 25% 공제 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90% 전액(100%) 지원대상	405,048	413,033	426,244	449,149	403,353	389,523	2,486,351
	93.7%	92.9%	91.8%	91.2%	90.1%	89.6%	91.6%
하위 0~90% 이용예상 영유아	115,844	187,104	267,681	266,345	183,122	122,700	1,142,797
	26.8%	42.1%	57.7%	54.1%	40.9%	28.2%	42.1%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1,020,097	122,700	1,142,797	1,142,797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90% 전액(100%) 지원대상	404,114	411,902	424,972	447,771	402,001	388,173	2,478,934
	93.5%	92.7%	91.5%	90.9%	89.8%	89.3%	91.3%
하위 0~90% 이용예상 영유아	115,577	186,592	266,882	265,528	182,509	122,274	1,139,362
	26.7%	42.0%	57.5%	53.9%	40.8%	28.1%	42.0%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1,017,088	122,274	1,139,362	1,139,362

□ 2011년 이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추가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변화에 대한 모의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영유아			연간 소요예산 국비(49.4%) 기준
		0~4세	5세	전체	
소득인정액 하위 70% 유지 시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78만명	9만 3천명	87만 2천명	1조 8,400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25% 공제 시	80만 7천명	9만 5천명	90만 2천명	1조 8,891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25% 공제 시	80만 9천명	9만 5천명	90만 4천명	1조 8,923억원
소득인정액 하위 80% 확대 시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88만 9천명	10만 6천명	99만 5천명	2조 291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25% 공제 시	91만 9천명	10만 9천명	102만 8천명	2조 816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25% 공제 시	92만 1천명	10만 9천명	103만명	2조 839억원
소득인정액 하위 90% 확대 시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99만 9천명	12만명	111만 9천명	2조 2,171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25% 공제 시	101만 9천명	12만 3천명	114만 2천명	2조 2,517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25% 공제 시	102만명	12만 3천명	114만 3천명	2조 2,530억원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영유아			연간 소요예산 국비(49.4%) 기준
		0~4세	5세	전체	
소득인정액 하위 70% 유지 시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76만 8천명	9만 1천명	85만명 9천명	1조 8,208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25% 공제 시	79만 5천명	9만 4천명	88만 9천명	1조 8,686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25% 공제 시	79만 7천명	9만 4천명	89만 1천명	1조 8,718억원
소득인정액 하위 80% 확대 시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88만 2천명	10만 5천명	98만 7천명	2조 160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25% 공제 시	91만 2천명	10만 8천명	102 만명	2조 688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25% 공제 시	91만 3천명	10만 8천명	102만 1천명	2조 712억원
소득인정액 하위 90% 확대 시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99만 6천명	12만명	111만 6천명	2조 2,109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25% 공제 시	101만 6천명	12만 2천명	113만 8천명	2조 2,466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25% 공제 시	101만 7천명	12만 2천명	113만 9천명	2조 2,479억원

제2절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적용 확대방안 모의분석

□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에 따라, 보육서비스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음

—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확대방안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음

- 맞벌이가구의 근로소득 중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했을 때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선정기준을 충족시키게 됨
- 이것은 가구규모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맞벌이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그러나, 최초로 도입된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방안의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소득인정액 산출 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 중 소득이 낮은 사람(2차 소득자로 대개 여성일 가능성이 높음)의 소득에서 25%를 공제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음

- 당초, 30~70% 수준의 근로소득공제 적용이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25% 수준으로 도입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음
- 특히, 소득이 낮은 2차 소득자의 소득을 공제하는 방식은, 제도의 적용과정이 복잡하고 맞벌이가구의 체감도가 낮을 정도로 제한적이며, 2차 소득자의 소득수준이 가구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맞벌이가구 내에서도 부부의 소득구성에 따라 공제 정도가 상이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음

□ 한편,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적용 시 가구유형 및 근로사업소득 보유 여부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비율 모의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선정비율이 홀벌이가구나 소득이 없는 가구와 비교할 때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 특히,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영사업자 맞벌이가구에 비해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선정비율이 더욱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근로소득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적용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구분			공제 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근로소득 맞벌이공제 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근로사업소득 맞벌이공제 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합계
			비 대상	지원 대상	비 대상	지원 대상	비 대상	지원 대상	
영유아 부모 및 근로 사업 소득 보유 여부에 따른 가구 유형	모자 가구	010000	1.8	98.2	1.8	98.2	1.8	98.2	100.0
		010001	6.6	93.4	6.6	93.4	6.6	93.4	100.0
		010010	19.1	80.9	19.1	80.9	19.1	80.9	100.0
		010011	45.2	54.8	45.2	54.8	45.2	54.8	100.0
	부자 가구	100000	2.6	97.4	2.6	97.4	2.6	97.4	100.0
		100100	9.4	90.6	9.4	90.6	9.4	90.6	100.0
		101000	32.0	68.0	32.0	68.0	32.0	68.0	100.0
		101100	54.5	45.5	54.5	45.5	54.5	45.5	100.0
	부부 가구	110000	3.4	96.6	3.4	96.6	3.4	96.6	100.0
		110001	8.6	91.4	8.6	91.4	8.6	91.4	100.0
		110010	17.8	82.2	17.8	82.2	17.8	82.2	100.0
		110011	38.7	61.3	38.7	61.3	38.7	61.3	100.0
		110100	11.6	88.4	11.6	88.4	11.6	88.4	100.0
		110101	20.3	79.7	20.3	79.7	18.1	81.9	100.0
		110110	34.1	65.9	34.1	65.9	27.2	72.8	100.0
		110111	50.4	49.6	50.4	49.6	45.3	54.7	100.0
		111000	34.8	65.2	34.8	65.2	34.8	65.2	100.0
		111001	44.5	55.5	44.5	55.5	40.1	59.9	100.0
		111010	75.9	24.1	59.6	40.4	59.6	40.4	100.0
		111011	78.9	21.1	68.3	31.7	66.5	33.5	100.0
		111100	56.5	43.5	56.5	43.5	56.5	43.5	100.0
		111101	58.9	41.1	58.9	41.1	56.0	44.0	100.0
		111110	82.2	17.8	75.0	25.0	73.4	26.6	100.0
		111111	91.3	8.7	88.7	11.3	86.4	13.6	100.0
	전체		30.8	69.2	28.3	71.7	28.2	71.8	100.0

주: 1)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6자리(□□/□□/□□) 중에, 첫 번째 2자리는 영유아의 부모 존재여부, 두 번째 2자리는 부의 소득유형별 보유여부(근로소득/사업소득), 세 번째 2자리는 모의 소득유형별 보유여부(근로소득/사업소득)를 나타내며 존재 또는 보유의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함

2) 음영부분은 부부가구 중 맞벌이가구를 의미함

□ 이에 따라,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과 연계하여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통한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방안을 모의분석함

- 우선적으로, 맞벌이가구의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에 대해 적용한 공제방식을 개선하여, 부부합산 근로소득에서 일정한 비율(현행 25%부터 50%까지)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가구 내 이차소득자의 소득수준(부부 중 낮은 소득)을 근로소득공제의 상한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분석함
- 이것은 결국 부부의 소득합산 결과에 따라 공제수준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체감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효과를 지님
- 다만,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적용되는 공적 행정자료의 특성 상 발생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형평성 문제, 특히 사업소득 관련 소득과약의 한계 등을 고려해야 함
- 이를 고려하여, 맞벌이가구의 해당여부 및 근로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를 결정할 때, 우선 사업소득을 배제하고 임금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근로 및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맞벌이가구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공제 대상 소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각각 모의 분석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영유아 및 예산규모에 대한 분석결과²⁾를 제시함
- 중장기적으로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보육료 지원이 더욱 필요한 맞벌이가구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의 WTC나 미국의 EITC와 같이 근로소득공제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맞벌이

2) 모의분석 과정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앞서 2011년 선정기준 확대 시 영유아 및 예산규모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DB 공적 행정자료의 누락항목에 의한 소득인정액 예상증가액(11만6천원)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와 이를 반영하여 조정된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함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정기준 등 보육료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축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부부합산 근로소득공제 30% 확대 적용 시

□ 맞벌이가구 공제 미적용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12,014 72.2%	316,924 71.3%	325,215 70.0%	343,860 69.8%	305,317 68.2%	294,403 67.7%	1,897,732 69.9%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89,236 20.6%	143,567 32.3%	204,235 44.0%	203,909 41.4%	138,614 31.0%	92,737 21.3%	872,297 32.1%
전체 영유아	432,164 100.0%	444,529 100.0%	464,282 100.0%	492,482 100.0%	447,432 100.0%	434,700 100.0%	2,715,589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779,560	5세 전액지원 대상 92,737	0~5세 전액지원 대상 872,297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72,297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07,326 71.1%	312,222 70.2%	320,592 69.1%	339,008 68.8%	300,991 67.3%	290,315 66.8%	1,870,454 68.9%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87,895 20.3%	141,437 31.8%	201,332 43.4%	201,032 40.8%	136,650 30.5%	91,449 21.0%	859,794 31.7%
전체 영유아	432,164 100.0%	444,529 100.0%	464,282 100.0%	492,482 100.0%	447,432 100.0%	434,700 100.0%	2,715,589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768,345	5세 전액지원 대상 91,449	0~5세 전액지원 대상 859,794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59,794

□ 근로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소득 30% 공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1,341	333,157	339,357	356,657	315,733	303,172	1,979,417
	76.7%	74.9%	73.1%	72.4%	70.6%	69.7%	72.9%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4,763	150,920	213,116	211,498	143,343	95,499	909,139
	21.9%	34.0%	45.9%	42.9%	32.0%	22.0%	33.5%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13,640	95,499	909,139	909,139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26,304	328,141	334,394	351,559	311,161	298,899	1,950,458
	75.5%	73.8%	72.0%	71.4%	69.5%	68.8%	71.8%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3,323	148,648	210,000	208,474	141,267	94,153	895,865
	21.6%	33.4%	45.2%	42.3%	31.6%	21.7%	33.0%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01,712	94,153	895,865	895,865

□ 근로사업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2,169	333,926	340,160	357,516	316,537	304,111	1,984,418
	76.9%	75.1%	73.3%	72.6%	70.7%	70.0%	73.1%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5,000	151,268	213,620	212,007	143,708	95,795	911,399
	22.0%	34.0%	46.0%	43.0%	32.1%	22.0%	33.6%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15,604	95,795	911,399	911,399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27,217	328,921	335,202	352,428	311,974	299,854	1,955,596
	75.7%	74.0%	72.2%	71.6%	69.7%	69.0%	72.0%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3,584	149,001	210,507	208,990	141,636	94,454	898,172
	21.7%	33.5%	45.3%	42.4%	31.7%	21.7%	33.1%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03,718	94,454	898,172	898,172

2. 부부합산 근로소득공제 35% 확대 적용 시

□ 맞벌이가구 공제 미적용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12,014	316,924	325,215	343,860	305,317	294,403	1,897,732
	72.2%	71.3%	70.0%	69.8%	68.2%	67.7%	69.9%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89,236	143,567	204,235	203,909	138,614	92,737	872,297
	20.6%	32.3%	44.0%	41.4%	31.0%	21.3%	32.1%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779,560	92,737	872,297	872,297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07,326	312,222	320,592	339,008	300,991	290,315	1,870,454
	71.1%	70.2%	69.1%	68.8%	67.3%	66.8%	68.9%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87,895	141,437	201,332	201,032	136,650	91,449	859,794
	20.3%	31.8%	43.4%	40.8%	30.5%	21.0%	31.7%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768,345	91,449	859,794	859,794

□ 근로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소득 35% 공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4,563	335,983	341,824	358,940	317,513	304,638	1,993,462
	77.4%	75.6%	73.6%	72.9%	71.0%	70.1%	73.4%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5,685	152,200	214,666	212,852	144,151	95,961	915,515
	22.1%	34.2%	46.2%	43.2%	32.2%	22.1%	33.7%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19,554	95,961	915,515	915,515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29,630	330,990	336,875	353,862	312,911	300,323	1,964,591
	76.3%	74.5%	72.6%	71.9%	69.9%	69.1%	72.3%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4,274	149,939	211,557	209,840	142,062	94,602	902,274
	21.8%	33.7%	45.6%	42.6%	31.8%	21.8%	33.2%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07,672	94,602	902,274	902,274

□ 근로사업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사업소득 35% 공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5,439	336,806	342,678	359,871	318,378	305,626	1,998,799
	77.6%	75.8%	73.8%	73.1%	71.2%	70.3%	73.6%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5,936	152,573	215,202	213,403	144,544	96,272	917,930
	22.2%	34.3%	46.4%	43.3%	32.3%	22.1%	33.8%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21,658	96,272	917,930	917,930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0,591	331,827	337,739	354,784	313,784	301,310	1,970,035
	76.5%	74.6%	72.7%	72.0%	70.1%	69.3%	72.5%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4,549	150,318	212,100	210,387	142,458	94,913	904,724
	21.9%	33.8%	45.7%	42.7%	31.8%	21.8%	33.3%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09,812	94,913	904,724	904,724

3. 부부합산 근로소득공제 40% 확대 적용 시

□ 맞벌이가구 공제 미적용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12,014	316,924	325,215	343,860	305,317	294,403	1,897,732
	72.2%	71.3%	70.0%	69.8%	68.2%	67.7%	69.9%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89,236	143,567	204,235	203,909	138,614	92,737	872,297
	20.6%	32.3%	44.0%	41.4%	31.0%	21.3%	32.1%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779,560	92,737	872,297	872,297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07,326	312,222	320,592	339,008	300,991	290,315	1,870,454
	71.1%	70.2%	69.1%	68.8%	67.3%	66.8%	68.9%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87,895	141,437	201,332	201,032	136,650	91,449	859,794
	20.3%	31.8%	43.4%	40.8%	30.5%	21.0%	31.7%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768,345	91,449	859,794	859,794

□ 근로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소득 40% 공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7,092	338,177	343,902	360,793	319,044	305,960	2,004,968
	78.0%	76.1%	74.1%	73.3%	71.3%	70.4%	73.8%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6,408	153,194	215,970	213,950	144,846	96,377	920,747
	22.3%	34.5%	46.5%	43.4%	32.4%	22.2%	33.9%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24,369	96,377	920,747	920,747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2,264	333,328	338,939	355,759	314,463	301,694	1,976,445
	76.9%	75.0%	73.0%	72.2%	70.3%	69.4%	72.8%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5,027	150,997	212,853	210,965	142,766	95,034	907,643
	22.0%	34.0%	45.8%	42.8%	31.9%	21.9%	33.4%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12,609	95,034	907,643	907,643

□ 근로사업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사업소득 40% 공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8,022	339,021	344,791	361,756	319,947	306,981	2,010,518
	78.2%	76.3%	74.3%	73.5%	71.5%	70.6%	74.0%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6,674	153,577	216,529	214,521	145,256	96,699	923,256
	22.4%	34.5%	46.6%	43.6%	32.5%	22.2%	34.0%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26,557	96,699	923,256	923,256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3,257	334,200	339,843	356,730	315,375	302,704	1,982,109
	77.1%	75.2%	73.2%	72.4%	70.5%	69.6%	73.0%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5,312	151,393	213,421	211,541	143,180	95,352	910,198
	22.1%	34.1%	46.0%	43.0%	32.0%	21.9%	33.5%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14,847	95,352	910,198	910,198

4. 부부합산 근로소득공제 45% 확대 적용 시

□ 맞벌이가구 공제 미적용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12,014	316,924	325,215	343,860	305,317	294,403	1,897,732
	72.2%	71.3%	70.0%	69.8%	68.2%	67.7%	69.9%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89,236	143,567	204,235	203,909	138,614	92,737	872,297
	20.6%	32.3%	44.0%	41.4%	31.0%	21.3%	32.1%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779,560	92,737	872,297	872,297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07,326	312,222	320,592	339,008	300,991	290,315	1,870,454
	71.1%	70.2%	69.1%	68.8%	67.3%	66.8%	68.9%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87,895	141,437	201,332	201,032	136,650	91,449	859,794
	20.3%	31.8%	43.4%	40.8%	30.5%	21.0%	31.7%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768,345	91,449	859,794	859,794

□ 근로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소득 45% 공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8,658	339,409	345,223	361,985	320,059	306,827	2,012,162
	78.4%	76.4%	74.4%	73.5%	71.5%	70.6%	74.1%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6,856	153,752	216,800	214,657	145,307	96,651	924,023
	22.4%	34.6%	46.7%	43.6%	32.5%	22.2%	34.0%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27,373	96,651	924,023	924,023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3,932	334,671	340,355	356,990	315,530	302,597	1,984,076
	77.3%	75.3%	73.3%	72.5%	70.5%	69.6%	73.1%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5,505	151,606	213,743	211,695	143,251	95,318	911,118
	22.1%	34.1%	46.0%	43.0%	32.0%	21.9%	33.6%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15,799	95,318	911,118	911,118

□ 근로사업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사업소득 45% 공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9,600	340,267	346,118	362,957	320,986	307,869	2,017,798
	78.6%	76.5%	74.5%	73.7%	71.7%	70.8%	74.3%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7,126	154,141	217,362	215,233	145,728	96,979	926,569
	22.5%	34.7%	46.8%	43.7%	32.6%	22.3%	34.1%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29,590	96,979	926,569	926,569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4,944	335,556	341,274	357,974	316,476	303,642	1,989,865
	77.5%	75.5%	73.5%	72.7%	70.7%	69.9%	73.3%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5,794	152,007	214,320	212,279	143,680	95,647	913,726
	22.2%	34.2%	46.2%	43.1%	32.1%	22.0%	33.6%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18,079	95,647	913,726	913,726

5. 부부합산 근로소득공제 50% 확대 적용 시

□ 맞벌이가구 공제 미적용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12,014	316,924	325,215	343,860	305,317	294,403	1,897,732
	72.2%	71.3%	70.0%	69.8%	68.2%	67.7%	69.9%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89,236	143,567	204,235	203,909	138,614	92,737	872,297
	20.6%	32.3%	44.0%	41.4%	31.0%	21.3%	32.1%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779,560	92,737	872,297	872,297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07,326	312,222	320,592	339,008	300,991	290,315	1,870,454
	71.1%	70.2%	69.1%	68.8%	67.3%	66.8%	68.9%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87,895	141,437	201,332	201,032	136,650	91,449	859,794
	20.3%	31.8%	43.4%	40.8%	30.5%	21.0%	31.7%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768,345	91,449	859,794	859,794

□ 근로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소득 50% 공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9,195	339,817	345,694	362,423	320,439	307,177	2,014,745
	78.5%	76.4%	74.5%	73.6%	71.6%	70.7%	74.2%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7,010	153,937	217,096	214,917	145,479	96,761	925,199
	22.4%	34.6%	46.8%	43.6%	32.5%	22.3%	34.1%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28,439	96,761	925,199	925,199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4,487	335,072	340,817	357,429	315,917	302,931	1,986,654
	77.4%	75.4%	73.4%	72.6%	70.6%	69.7%	73.2%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5,663	151,788	214,033	211,955	143,427	95,423	912,289
	22.1%	34.1%	46.1%	43.0%	32.1%	22.0%	33.6%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16,866	95,423	912,289	912,289

□ 근로사업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근로사업소득 50% 공제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40,138	340,675	346,587	363,398	321,370	308,223	2,020,390
	78.7%	76.6%	74.7%	73.8%	71.8%	70.9%	74.4%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7,280	154,326	217,656	215,495	145,902	97,090	927,749
	22.5%	34.7%	46.9%	43.8%	32.6%	22.3%	34.2%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30,659	97,090	927,749	927,749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70% 전액(100%) 지원대상	335,501	335,955	341,728	358,413	316,860	303,978	1,992,436
	77.6%	75.6%	73.6%	72.8%	70.8%	69.9%	73.4%
하위 0-70% 이용예상 영유아	95,953	152,188	214,605	212,539	143,854	95,753	914,893
	22.2%	34.2%	46.2%	43.2%	32.2%	22.0%	33.7%
전체 영유아	432,164	444,529	464,282	492,482	447,432	434,700	2,715,5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4세 전액지원 대상	5세 전액지원 대상	0~5세 전액지원 대상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
				819,140	95,753	914,893	914,893

□ 맞벌이가구 대상 근로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변화 모의분석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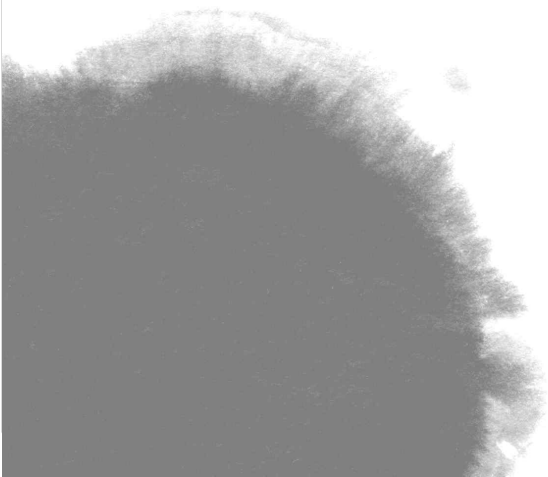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소득인정액 하위 70% 전액지원 유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영유아			연간소요예산 국비(49.4%) 기준
		0~4세	5세	전체	
근로소득공제 25% 유지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78만명	9만 3천명	87만 2천명	1조 8,400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0만 7천명	9만 5천명	90만 2천명	1조 8,891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0만 9천명	9만 5천명	90만 4천명	1조 8,923억원
근로소득공제 30% 확대 적용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78만명	9만 3천명	87만 2천명	1조 8,400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1만 4천명	9만 5천명	90만 9천명	1조 9,002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1만 6천명	9만 6천명	91만 2천명	1조 9,037억원
근로소득공제 35% 확대 적용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78만명	9만 3천명	87만 2천명	1조 8,400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2만명	9만 6천명	91만 6천명	1조 9,106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2만 2천명	9만 6천명	91만 8천명	1조 9,143억원
근로소득공제 40% 확대 적용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78만명	9만 3천명	87만 2천명	1조 8,400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2만 4천명	9만 6천명	92만명	1조 9,191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2만 7천명	9만 7천명	92만 4천명	1조 9,229억원
근로소득공제 45% 확대 적용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78만명	9만 3천명	87만 2천명	1조 8,400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2만 7천명	9만 7천명	92만 4천명	1조 9,243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3만명	9만 7천명	92만 7천명	1조 9,282억원
근로소득공제 50% 확대 적용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78만명	9만 3천명	87만 2천명	1조 8,400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2만 8천명	9만 7천명	92만 5천명	1조 9,262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3만 1천명	9만 7천명	92만 8천명	1조 9,300억원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소득인정액 하위 70% 전액지원 유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영유아			연간 소요예산 국비(49.4%) 기준
		0~4세	5세	전체	
근로소득공제 25% 유지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76만 8천명	9만 1천명	85만명 9천명	1조 8,208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79만 5천명	9만 4천명	88만 9천명	1조 8,686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79만 7천명	9만 4천명	89만 1천명	1조 8,718억원
근로소득공제 30% 확대 적용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76만 8천명	9만 1천명	85만명 9천명	1조 8,208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0만 2천명	9만 4천명	89만 6천명	1조 8,797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0만 4천명	9만 4천명	89만 8천명	1조 8,832억원
근로소득공제 35% 확대 적용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76만 8천명	9만 1천명	85만명 9천명	1조 8,208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0만 8천명	9만 5천명	90만 2천명	1조 8,901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1만명	9만 5천명	90만 5천명	1조 8,939억원
근로소득공제 40% 확대 적용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76만 8천명	9만 1천명	85만명 9천명	1조 8,208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1만 3천명	9만 5천명	90만 8천명	1조 8,988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1만 5천명	9만 5천명	91만명	1조 9,028억원
근로소득공제 45% 확대 적용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76만 8천명	9만 1천명	85만명 9천명	1조 8,208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1만 6천명	9만 5천명	91만 1천명	1조 9,044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1만 8천명	9만 6천명	91만 4천명	1조 9,084억원
근로소득공제 50% 확대 적용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76만 8천명	9만 1천명	85만명 9천명	1조 8,208억원
	근로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1만 7천명	9만 5천명	91만 2천명	1조 9,063억원
	근로사업소득 기준 부부합산 공제 시	81만 9천명	9만 6천명	91만 5천명	1조 9,102억원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관련
향후 정책과제



제6장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관련 향후 정책과제

1.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보완

□ 2009년 7월 선정체계 개편 및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의 한계점

- 2009년 7월 개편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방식을 준용했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의 소득인정액 개념 및 선정방식을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전환
 - 이에 따라, 2009년 확대 개편을 위한 선정기준 도출 및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과정에서도 선정방식 개편사항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DB로부터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영유아 가구 DB를 구축하였음
- 그러나, 사전에 공적 행정자료에 의해 DB로 구축 가능한 소득 및 재산항목을 중심으로 구축되므로, 실제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소득인정액 산정 시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항목 가운데 일부 항목은 분석 DB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반영되는 소득 및 재산항목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일부 공적 이전소득(산재보험급여, 보훈연금 등)과 보육료지원 신청 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조회가 이루어지는

금융재산,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임차보증금, 자동차가액, 금융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보완 필요사항

— 향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시 모의분석을 위한 분석 DB에 원천적으로 구축될 수 없는 누락 항목(금융재산, 부채, 전월세보증금 등)에 대한 보정여부와 보정방법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일차적으로 도출된 선정기준을 보정하여 최종적으로 선정기준 조정안을 확정해야 함

- 전체 영유아 가구의 금융재산 및 부채 등 누락 항목에 대한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보정치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계청 가계자산조사과 가계동향조사,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 조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것은 실제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적용되는 공적 행정자료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님
- 반면에, 2010년 이후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정보를 활용하여 전체 또는 일부 계층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누락 항목의 평균값 등을 산출하여 이를 선정기준 조정안에 반영하여 보정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보정방법으로는 전체 영유아 가구의 평균,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일부 계층(소득인정액 하위 60~70% 또는 70% 전후의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을 산출하여 보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기초통계

－ 전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추출한 소득 인정액 구성항목별 기초통계는 다음과 같음

- 누락항목 중 보유비율을 고려할 때 향후 반영되어야 할 필수적인 항목들은 금융재산(74.5%) 및 금융부채(40.1%), 자동차(64.5%), 전월세보증금(46.4%)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		소득인정액 하위 0~70% (전체)			소득인정액 하위 60~70%		
		전체평균	보유 비율	보유가구 평균	전체평균	보유 비율	보유가구 평균
소득	소 계	1,683,156	93.5%	1,801,105	2,898,279	99.2%	2,921,691
	근로소득	1,479,249	80.7%	1,833,553	2,681,873	92.3%	2,906,051
	사업소득	174,030	16.7%	1,044,858	185,125	13.5%	1,373,305
	재산소득	2,619	0.7%	351,825	5,973	1.5%	404,654
	공적이전소득	27,258	7.4%	368,210	25,307	3.7%	692,492
재산	소 계	65,759,834	95.3%	68,979,518	119,994,782	99.6%	120,458,479
	일반재산 (건축물)	751,527	2.3%	32,632,790	1,553,804	3.8%	41,394,988
	일반재산 (주택)	27,509,532	34.7%	79,265,879	55,359,585	56.2%	98,579,168
	일반재산 (토지)	3,270,263	11.3%	28,831,146	6,271,948	16.3%	38,471,291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2,645	0.1%	2,386,223	2,493	0.1%	3,439,229
	일반재산 (어업권 등)	289	0.0%	23,000,250	55	0.0%	6,800,000
	일반재산 (회원권 등)	160,127	0.1%	146,629,416	407,122	0.3%	157,489,021
	금융재산 (금융조회)	13,919,245	74.5%	18,673,449	26,072,552	90.0%	28,957,221
	자동차	4,428,088	64.5%	6,861,630	6,356,413	79.1%	8,039,328
	전월세보증금	15,718,117	46.4%	33,902,733	23,970,811	41.5%	57,730,978
부채	소 계	22,296,062	41.5%	53,711,503	39,453,634	59.7%	66,039,166
	금융부채	19,579,675	40.1%	48,805,863	33,313,561	57.1%	58,364,181
	금융기관 이외 부채	618,767	1.5%	41,874,700	1,293,545	3.4%	37,883,165
	임대보증금	2,097,620	2.4%	85,780,823	4,846,528	5.1%	95,148,273

자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준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기초통계 추출

— 전체 영유아 가구 중에 41.2%를 차지하는 4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출한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기초통계 역시 전체 영유아 가구와
보유비율이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임

- 금융재산 77.5%, 금융부채 43.2%, 자동차 70.1%, 전월세보증금 46.3%로 나타남

소득인정액 구성항목		소득인정액 하위 0~70% (전체)			소득인정액 하위 60~70%		
		전체평균	보유 비율	보유가구 평균	전체평균	보유 비율	보유가구 평균
소득	소 계	1,839,297	95.4%	1,928,725	2,949,000	99.3%	2,970,004
	근로소득	1,629,662	83.1%	1,960,650	2,746,653	92.8%	2,960,395
	사업소득	181,704	17.0%	1,071,062	172,790	12.7%	1,359,908
	재산소득	2,860	0.8%	352,946	5,756	1.5%	393,828
	공적이전소득	25,070	4.9%	507,205	23,801	3.2%	753,311
재산	소 계	74,419,594	97.5%	76,297,565	124,173,545	99.8%	124,476,740
	일반재산 (건축물)	774,475	2.3%	33,513,176	1,410,424	3.5%	40,716,346
	일반재산 (주택)	32,774,182	39.8%	82,293,014	59,660,827	59.2%	100,776,408
	일반재산 (토지)	3,362,247	11.8%	28,586,613	5,910,144	16.1%	36,615,734
	일반재산 (선박, 항공기)	2,866	0.1%	2,698,270	2,654	0.1%	3,424,596
	일반재산 (어업권 등)	167	0.0%	21,916,667	0	0.0%	0
	일반재산 (회원권 등)	199,527	0.1%	151,594,492	473,170	0.3%	164,374,262
	금융재산 (금융조회)	15,377,250	77.5%	19,833,225	26,474,169	90.4%	29,294,701
	자동차	4,837,905	70.1%	6,905,978	6,378,717	80.5%	7,923,039
	전월세보증금	17,090,975	46.3%	36,935,907	23,863,440	40.1%	59,577,796
부채	소 계	26,146,390	44.9%	58,266,931	41,888,737	60.5%	69,228,848
	금융부채	22,503,214	43.2%	52,050,643	34,449,335	57.6%	59,823,730
	금융기관 이외 부채	757,536	1.8%	42,439,297	1,509,412	3.8%	39,473,613
	임대보증금	2,885,639	2.9%	99,795,454	5,929,990	5.5%	108,339,642

자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준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기초통계 추출

□ 이상에서 살펴본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선정기준 도출 시 보정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중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보유현황을 기초로 한 소득인정액 보정금액 산출

구분	소득인정액 하위 0~70%(전체)		소득인정액 하위 60~70%	
	전체평균	보유가구 평균	전체평균	보유가구 평균
최종 소득인정액 보정금액	193,082	1,099,435	266,519	1,632,422
소득평가액 보정금액	27,258	368,210	25,307	692,492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정금액	165,824	731,225	241,211	939,931
보정 재산가액	34,225,867	229,067,477	56,806,953	259,016,547
보정 부채액	22,296,062	176,461,386	39,453,634	191,395,620
보정 순재산가액	11,929,804	52,606,091	17,353,319	67,620,928

- 소득인정액 하위 0~70%인 전체 보육료 지원 수급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보정금액을 모의 산출한 결과 약 19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선정기준 변화와 선정여부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하위 60~70%의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는 약 26만 7천원임
 - 각 항목별 보유가구의 평균을 고려한 보정금액 모의 산출결과는 각각 100만원을 상회하므로 적절한 보정금액이라고 할 수 없음
- －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중 영유아 가구 중 4인가구의 소득·재산 보유현황을 기초로 모의 산출한 소득인정액 보정금액은 다음과 같음
- 4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보정금액을 우선 산출하여 가구

균등화지수에 의해 가구규모별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전체 영유아 가구의 보정금액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보다는 적절함

구분	소득인정액 하위 0~70%(전체)		소득인정액 하위 60~70%	
	전체평균	보유가구 평균	전체평균	보유가구 평균
최종 소득인정액 보정금액	182,966	1,103,527	236,482	1,497,417
소득평가액 보정금액	25,070	507,205	23,801	753,311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정금액	157,896	596,322	212,681	744,106
보정 재산가액	37,505,825	237,186,269	57,189,495	261,169,799
보정 부채액	26,146,390	194,285,393	41,888,737	207,636,985
보정 순재산가액	11,359,435	42,900,875	15,300,758	53,532,813

- 소득인정액 하위 0~70%인 전체 보육료 지원 수급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보정금액을 모의 산출한 결과 약 18만 3천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소득인정액 하위 60~70%의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는 약 23만 6천원으로 역시 낮게 나타났음
-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적용 및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모의분석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하위 0~70% 계층으로부터 산출한 보정금액(18만3천원)에서 자동차세액 정보에 의해 부분적으로 분석에 반영 가능한 자동차가액 보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정금액(11만6천원)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와 반영하여 조정한 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음

2. 지역별 보육료지원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초공제액 조정

□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있어서 작용되고 있는 기초공제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과 유사한 보편적 제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제액 수준은 여타 제도의 절반 수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보육료 지원 기초공제액

-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기초노령연금 & 장애인연금 기초공제액

- :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보육료 지원 일반재산 환산율 : 연 16.68%

- 기초노령연금 & 장애인연금 일반재산 환산율 : 연 5%

□ 그러나, 이와 같은 기초공제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절대적 수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대도시,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영유아 가구의 수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전체 영유아 가구의 하위 70%까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되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신청률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유아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영유아 가구 중 실질적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 가구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에 대한 불만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등 다른 이슈와 연계되어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되는 등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체감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역별 수급 불균형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과 관련하여 기초공제액 적용실태 및 지역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비율 모의분석 결과를 살펴봄

— 먼저, 시도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기초공제 전 일반재산가액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유아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의 기초공제 전 일반재산가액 평균이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높으며, 소득평가액은 서울과 울산이 3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도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	시도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
서울	18.9%	강원	2.7%
부산	5.7%	충북	3.1%
대구	4.6%	충남	4.2%
인천	5.7%	전북	3.3%
광주	3.1%	전남	3.2%
대전	3.2%	경북	4.8%
울산	2.4%	경남	6.8%
경기	27.2%	제주	1.2%

시도	소득평가액 평균	기초공제 전 일반재산가액 평균	시도	소득평가액 평균	기초공제 전 일반재산가액 평균
서울	353만원	1억 7,377만원	강원	195만원	5,367만원
부산	257만원	8,090만원	충북	227만원	6,403만원
대구	235만원	7,621만원	충남	236만원	7,222만원
인천	233만원	9,748만원	전북	204만원	5,501만원
광주	239만원	6,385만원	전남	192만원	4,039만원
대전	270만원	7,945만원	경북	215만원	5,401만원
울산	305만원	8,005만원	경남	241만원	6,420만원
경기	281만원	1억 1,613만원	제주	198만원	6,341만원
전 체		269만원	1억 174만원		

— 기초공제 적용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일반재산가액 평균 대비 기초공제액 수준을 분석한 결과, 중소도시 지역이 37.3%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앞서 시도별 분석결과를 기초로 볼 때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영향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음

- 대도시 지역의 평균 공제 수준은 약 44.4%로 나타났는데, 서울과 6대 광역시에 해당하는 대도시 지역을 다시 시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도별로 매우 큰 편차를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육료 지원의 불균형 문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지방 광역시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평균(57.3%)보다 높은 만큼 현행 기초공제액 적용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됨

구분		기초공제액 (A)	기초공제 전 일반재산가액 평균 (B)	기초공제 전 일반재산가액 평균 대비 기초공제액 수준 (A/B)	
기초공제액 적용 지역구분	대도시	5,400만원	1억 2,161만원	44.4%	
	시 도	5,400만원	서울	1억 7,377만원	31.1%
			부산	8,090만원	66.7%
			대구	7,621만원	70.9%
			인천	9,748만원	55.4%
			광주	6,385만원	84.6%
			대전	7,945만원	68.0%
			울산	8,005만원	67.5%
	중소도시	3,400만원	9,105만원	37.3%	
	농어촌	2,900만원	5,063만원	57.3%	
전 체		-	1억 174만원	-	

□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안(4인 가구 480만원, 전국 단일 기준)을 모의 적용하여 각 지역별 영유아 가구 중에 보육료 지원대상인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선정될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초공제 적용 전 일반재산가액 평균 대비 기초공제액 적용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서울의 경우,

맞벌이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전 지원대상 선정비율은 56%로 나타났으며 현행과 같이 근로소득 기준으로 맞벌이가구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58.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다음으로 중소도시의 평균 기초공제액 적용비율이 낮아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경기 지역의 경우 맞벌이가구 공제 적용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63.3%와 65.6%로 분석되었는데, 전국의 영유아 가구 중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가 약 46%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는 더욱 크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
 - 울산 역시 선정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대전과 인천이 70%에 근접하게 나타났고, 나머지 시도는 70%를 상회하였음
-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적용 시 시도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비율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공제 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근로소득 맞벌이공제 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근로사업소득 맞벌이공제 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합계
		비대상	지원대상	비대상	지원대상	비대상	지원대상	
시 도 구 분	서울	44.0%	56.0%	41.4%	58.6%	41.2%	58.8%	100.0%
	부산	25.3%	74.7%	22.3%	77.7%	22.1%	77.9%	100.0%
	대구	21.8%	78.2%	19.3%	80.7%	19.2%	80.8%	100.0%
	인천	27.1%	72.9%	24.8%	75.2%	24.6%	75.4%	100.0%
	광주	21.4%	78.6%	18.4%	81.6%	18.2%	81.8%	100.0%
	대전	28.4%	71.6%	25.4%	74.6%	25.3%	74.7%	100.0%
	울산	33.9%	66.1%	31.6%	68.4%	31.4%	68.6%	100.0%
	경기	36.7%	63.3%	34.4%	65.6%	34.2%	65.8%	100.0%
	강원	18.1%	81.9%	15.6%	84.4%	15.5%	84.5%	100.0%
	충북	22.1%	77.9%	19.3%	80.7%	19.1%	80.9%	100.0%
	충남	26.3%	73.7%	24.1%	75.9%	24.0%	76.0%	100.0%
	전북	18.2%	81.8%	15.9%	84.1%	15.8%	84.2%	100.0%
	전남	14.7%	85.3%	12.5%	87.5%	12.4%	87.6%	100.0%
	경북	19.7%	80.3%	17.5%	82.5%	17.4%	82.6%	100.0%
	경남	24.3%	75.7%	21.9%	78.1%	21.7%	78.3%	100.0%
제주	18.3%	81.7%	15.3%	84.7%	15.1%	84.9%	100.0%	
전체		30.8%	69.2%	28.3%	71.7%	28.2%	71.8%	100.0%

• <참고>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공제 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근로소득 맞벌이공제 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근로사업소득 맞벌이공제 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합계
		비대상	지원대상	비대상	지원대상	비대상	지원대상	
시 도 구 분	서울	44.9%	55.1%	42.5%	57.5%	42.2%	57.8%	100.0%
	부산	26.3%	73.7%	23.4%	76.6%	23.2%	76.8%	100.0%
	대구	22.6%	77.4%	20.2%	79.8%	20.0%	80.0%	100.0%
	인천	28.2%	71.8%	25.9%	74.1%	25.7%	74.3%	100.0%
	광주	22.3%	77.7%	19.3%	80.7%	19.2%	80.8%	100.0%
	대전	29.4%	70.6%	26.5%	73.5%	26.4%	73.6%	100.0%
	울산	35.3%	64.7%	33.0%	67.0%	32.9%	67.1%	100.0%
	경기	37.7%	62.3%	35.6%	64.4%	35.4%	64.6%	100.0%
	강원	18.9%	81.1%	16.5%	83.5%	16.3%	83.7%	100.0%
	충북	23.2%	76.8%	20.4%	79.6%	20.2%	79.8%	100.0%
	충남	27.4%	72.6%	25.2%	74.8%	25.1%	74.9%	100.0%
	전북	19.1%	80.9%	16.9%	83.1%	16.7%	83.3%	100.0%
	전남	15.6%	84.4%	13.4%	86.6%	13.3%	86.7%	100.0%
	경북	20.7%	79.3%	18.5%	81.5%	18.4%	81.6%	100.0%
	경남	25.4%	74.6%	23.0%	77.0%	22.8%	77.2%	100.0%
	제주	19.0%	81.0%	16.0%	84.0%	15.9%	84.1%	100.0%
전체		31.8%	68.2%	29.4%	70.6%	29.2%	70.8%	100.0%

- 이처럼 지역별 보육료 지원 수급 불균형 문제는,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의 선정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단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상황과 이러한 선정기준 도출과정에서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적용되는 기초공제 수준이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마련 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별 보육료 지원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

3.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형평성 제고

-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당시,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지자체의 자산조사 등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실사 중심에서 공적 행정자료 우선 활용 원칙으로 전환함
 - 이러한 변화는 공적 행정자료 연계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복지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축되어 2010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인해 가능하였음
- 그러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인해 복지대상 선정, 급여생성 및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산조사 등 전반적인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공적 행정자료 중 시차 문제 등 일부 원자료의 한계로 인해 공적 행정자료 우선 적용원칙에 따른 선정과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선별적 공공부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편적 수준으로 확대된 보육료 지원제도의 경우, 지원대상의 규모가 확대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선정에 있어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처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공적 행정자료 우선적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은 자영사업자의 사업소득 파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공적 행정자료 적용 시, 상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보수월액 자료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향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보 연계가 확대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사회보험 또는 국세청 자료가 반영될 것임
 - 반면, 자영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연계되고 있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활용되는데,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 간의 소득과약을 차이,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총 급여액

또는 건강보험보수월액 개념과 국세청 사업소득금액의 개념 및 수준 차이로 인해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선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존재함

- 2011년 3월부터 모든 보육료 지원대상이 전액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급여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뿐만 아니라 향후 대부분의 복지정책, 특히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제도의 경우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조세체계에서 제기되는 과세 형평성 문제와 마찬가지로 복지행정에 있어서도 소득과약(유리지갑) 및 자산조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선정체계와 관련된 불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결과는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모의 적용하여 분석한 가구 유형 및 근로·사업소득 보유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분포와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배우자 유무에 따라 영유아 가구 유형을 구분하면, 부부가구 84.6%, 부자가구 7.6%, 모자가구 7.8%를 차지함

- 소득 보유유형을 함께 고려하면, 부부가구이면서, 세대주인 부가 근로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유형이 약 3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부가구면서 공적 행정자료 상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는 가구가 17.7%임
- 특히, 부부가구면서 근로소득 맞벌이가구인 경우 14.4%로 나타난 반면, 근로소득 맞벌이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영유아 가구 중에서 약 5%를 차지하는데 머물렀으나 선정되지 못한 가구 중에서는 35.6%를 차지하였음
- 반면, 부부가구 중 영유아의 아버지가 사업소득만 보유한 경우가 4.7%를 차지하고 있어 대표적인데, 이러한 가구는 전체 지원대상 선정가구 중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상승함

□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모의 적용 시 가구유형 및 근로사업소득 보유
여부별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가구 분포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공제 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근로소득 맞벌이공제 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근로사업소득 맞벌이공제 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비 대상	지원 대상	전체	비 대상	지원 대상	전체	비 대상	지원 대상	전체
영유아 부모 및 근로 사업 소득 보유 여부에 따른 가구 유형	모자 가구	010000	0.3	7.0	4.9	0.3	6.7	4.9	0.3	6.7	4.9
		010001	0.1	0.6	0.4	0.1	0.6	0.4	0.1	0.6	0.4
		010010	1.4	2.7	2.3	1.6	2.6	2.3	1.6	2.6	2.3
		010011	0.1	0.1	0.1	0.1	0.1	0.1	0.1	0.1	0.1
	부자 가구	100000	0.3	4.3	3.0	0.3	4.1	3.0	0.3	4.1	3.0
		100100	0.2	0.7	0.5	0.2	0.6	0.5	0.2	0.6	0.5
		101000	4.0	3.8	3.9	4.4	3.7	3.9	4.4	3.7	3.9
		101100	0.4	0.1	0.2	0.4	0.1	0.2	0.4	0.1	0.2
	부부 가구	110000	1.9	24.7	17.7	2.1	23.8	17.7	2.1	23.8	17.7
		110001	0.4	1.8	1.3	0.4	1.7	1.3	0.4	1.7	1.3
		110010	2.5	5.1	4.3	2.7	5.0	4.3	2.7	5.0	4.3
		110011	0.2	0.2	0.2	0.3	0.2	0.2	0.3	0.2	0.2
		110100	1.8	6.0	4.7	1.9	5.8	4.7	1.9	5.8	4.7
		110101	0.3	0.5	0.4	0.3	0.5	0.4	0.3	0.5	0.4
		110110	1.1	0.9	1.0	1.1	0.9	1.0	0.9	1.0	1.0
		110111	0.1	0.0	0.0	0.1	0.0	0.0	0.1	0.0	0.0
		111000	40.3	33.6	35.6	43.8	32.4	35.6	44.1	32.3	35.6
		111001	2.6	1.4	1.8	2.8	1.4	1.8	2.6	1.5	1.8
		111010	35.6	5.0	14.4	30.3	8.2	14.4	30.5	8.1	14.4
		111011	0.8	0.1	0.3	0.7	0.1	0.3	0.7	0.1	0.3
		111100	3.5	1.2	1.9	3.8	1.2	1.9	3.8	1.2	1.9
		111101	0.3	0.1	0.1	0.3	0.1	0.1	0.3	0.1	0.1
		111110	1.7	0.2	0.6	1.7	0.2	0.6	1.6	0.2	0.6
		111111	0.2	0.0	0.1	0.2	0.0	0.1	0.2	0.0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6자리 코드(□□□□□□) 중, 첫 번째 2자리는 영유아의 부모 존재여부, 두 번째 2자리는 부의 소득유형별 보유여부(근로소득/사업소득), 세 번째 2자리는 모의 소득유형별 보유여부(근로소득/사업소득)를 나타내며 존재 또는 보유의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함

○ <참고>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공제 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근로소득 맞벌이공제 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근로사업소득 맞벌이공제 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비 대상	지원 대상	전체	비 대상	지원 대상	전체	비 대상	지원 대상	전체
영유아 부모 및 근로 사업 소득 보유 여부에 따른 가구 유형	모자 가구	010000	0.3	7.1	4.9	0.3	6.8	4.9	0.3	6.8	4.9
		010001	0.1	0.6	0.4	0.1	0.6	0.4	0.1	0.6	0.4
		010010	1.5	2.7	2.3	1.6	2.6	2.3	1.6	2.6	2.3
		010011	0.1	0.1	0.1	0.1	0.1	0.1	0.1	0.1	0.1
	부자 가구	100000	0.3	4.3	3.0	0.3	4.2	3.0	0.3	4.2	3.0
		100100	0.2	0.7	0.5	0.2	0.6	0.5	0.2	0.6	0.5
		101000	4.1	3.8	3.9	4.4	3.7	3.9	4.5	3.6	3.9
		101100	0.3	0.1	0.2	0.4	0.1	0.2	0.4	0.1	0.2
	부부 가구	110000	2.0	25.0	17.7	2.1	24.2	17.7	2.1	24.1	17.7
		110001	0.4	1.8	1.3	0.4	1.7	1.3	0.4	1.7	1.3
		110010	2.6	5.2	4.3	2.8	5.0	4.3	2.8	5.0	4.3
		110011	0.2	0.2	0.2	0.3	0.2	0.2	0.3	0.2	0.2
		110100	1.8	6.1	4.7	1.9	5.9	4.7	2.0	5.9	4.7
		110101	0.3	0.5	0.4	0.3	0.5	0.4	0.3	0.5	0.4
		110110	1.1	0.9	1.0	1.2	0.9	1.0	0.9	1.0	1.0
		110111	0.1	0.0	0.0	0.1	0.0	0.0	0.1	0.0	0.0
		111000	40.7	33.3	35.6	44.0	32.2	35.6	44.3	32.1	35.6
		111001	2.6	1.4	1.8	2.8	1.4	1.8	2.6	1.5	1.8
		111010	35.1	4.8	14.4	30.2	7.9	14.4	30.3	7.9	14.4
		111011	0.8	0.1	0.3	0.7	0.1	0.3	0.7	0.1	0.3
		111100	3.4	1.2	1.9	3.7	1.2	1.9	3.7	1.2	1.9
		111101	0.3	0.1	0.1	0.3	0.1	0.1	0.3	0.1	0.1
		111110	1.6	0.2	0.6	1.6	0.2	0.6	1.6	0.2	0.6
		111111	0.2	0.0	0.1	0.2	0.0	0.1	0.2	0.0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6자리 코드(□□/□□/□□) 중, 첫 번째 2자리는 영유아의 부모 존재여부, 두 번째 2자리는 부의 소득유형별 보유여부(근로소득/사업소득), 세 번째 2자리는 모의 소득유형별 보유여부(근로소득/사업소득)를 나타내며 존재 또는 보유의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함

□ 다음으로, 위와 같은 가구유형별 구성분포를 참고로 2011년 선정기준 조정안 적용 시 가구유형 및 근로사업소득 보유여부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비율 모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와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보유하고 있는 가구 간의 선정비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맞벌이가구 등 근로 및 사업소득을 동시에 보유한 가구를 제외하면,

모든 가구유형(부부, 모자, 부자)에서 사업소득만을 보유한 가구에 비해 근로소득만을 보유한 가구의 선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부부가구 : 65.2%(부_근로소득) vs. 88.4%(부_사업소득)
- 모자가구 : 80.9%(모_근로소득) vs. 93.4%(모_사업소득)
- 부자가구 : 68.0%(부_근로소득) vs. 90.6%(부_사업소득)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미반영 시

구분			공제 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근로소득 맞팔이공제 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근로사업소득 맞팔이공제 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합계
			비 대상	지원 대상	비 대상	지원 대상	비 대상	지원 대상	
영유아 부모 및 근로 사업 소득 보유 여부에 따른 가구 유형	모자 가구	010000	1.8	98.2	1.8	98.2	1.8	98.2	100.0
		010001	6.6	93.4	6.6	93.4	6.6	93.4	100.0
		010010	19.1	80.9	19.1	80.9	19.1	80.9	100.0
		010011	45.2	54.8	45.2	54.8	45.2	54.8	100.0
	부자 가구	100000	2.6	97.4	2.6	97.4	2.6	97.4	100.0
		100100	9.4	90.6	9.4	90.6	9.4	90.6	100.0
		101000	32.0	68.0	32.0	68.0	32.0	68.0	100.0
		101100	54.5	45.5	54.5	45.5	54.5	45.5	100.0
	부부 가구	110000	3.4	96.6	3.4	96.6	3.4	96.6	100.0
		110001	8.6	91.4	8.6	91.4	8.6	91.4	100.0
		110010	17.8	82.2	17.8	82.2	17.8	82.2	100.0
		110011	38.7	61.3	38.7	61.3	38.7	61.3	100.0
		110100	11.6	88.4	11.6	88.4	11.6	88.4	100.0
		110101	20.3	79.7	20.3	79.7	18.1	81.9	100.0
		110110	34.1	65.9	34.1	65.9	27.2	72.8	100.0
		110111	50.4	49.6	50.4	49.6	45.3	54.7	100.0
		111000	34.8	65.2	34.8	65.2	34.8	65.2	100.0
		111001	44.5	55.5	44.5	55.5	40.1	59.9	100.0
		111010	75.9	24.1	59.6	40.4	59.6	40.4	100.0
		111011	78.9	21.1	68.3	31.7	66.5	33.5	100.0
		111100	56.5	43.5	56.5	43.5	56.5	43.5	100.0
		111101	58.9	41.1	58.9	41.1	56.0	44.0	100.0
		111110	82.2	17.8	75.0	25.0	73.4	26.6	100.0
		111111	91.3	8.7	88.7	11.3	86.4	13.6	100.0
		전체	30.8	69.2	28.3	71.7	28.2	71.8	100.0

주: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6자리 코드(□□/□□/□□) 중, 첫 번째 2자리는 영유아의 부모 존재여부, 두 번째 2자리는 부의 소득유형별 보유여부(근로소득/사업소득), 세 번째 2자리는 모의 소득유형별 보유여부(근로소득/사업소득)를 나타내며 존재 또는 보유의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함

— 건강보험 DB 누락항목에 의한 예상 소득인정액 증가액 반영 조정 시

구분			공제 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근로소득 맞벌이공제 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근로사업소득 맞벌이공제 후 70% 선정기준 적용 시 지원대상 여부		합계
			비 대상	지원 대상	비 대상	지원 대상	비 대상	지원 대상	
영유아 부모 및 근로 사업 소득 보유 여부에 따른 가구 유형	모자 가구	010000	1.9	98.1	1.9	98.1	1.9	98.1	100.0
		010001	6.9	93.1	6.9	93.1	6.9	93.1	100.0
		010010	20.3	79.7	20.3	79.7	20.3	79.7	100.0
		010011	46.0	54.0	46.0	54.0	46.0	54.0	100.0
	부자 가구	100000	2.7	97.3	2.7	97.3	2.7	97.3	100.0
		100100	9.8	90.2	9.8	90.2	9.8	90.2	100.0
		101000	33.7	66.3	33.7	66.3	33.7	66.3	100.0
		101100	55.2	44.8	55.2	44.8	55.2	44.8	100.0
	부부 가구	110000	3.5	96.5	3.5	96.5	3.5	96.5	100.0
		110001	9.0	91.0	9.0	91.0	9.0	91.0	100.0
		110010	18.7	81.3	18.7	81.3	18.7	81.3	100.0
		110011	39.4	60.6	39.4	60.6	39.4	60.6	100.0
		110100	12.1	87.9	12.1	87.9	12.1	87.9	100.0
		110101	21.1	78.9	21.1	78.9	18.8	81.2	100.0
		110110	35.6	64.4	35.6	64.4	28.4	71.6	100.0
		110111	51.3	48.7	51.3	48.7	46.5	53.5	100.0
		111000	36.3	63.7	36.3	63.7	36.3	63.7	100.0
		111001	46.2	53.8	46.2	53.8	41.7	58.3	100.0
		111010	77.4	22.6	61.4	38.6	61.4	38.6	100.0
		111011	80.0	20.0	69.5	30.5	67.8	32.2	100.0
		111100	57.3	42.7	57.3	42.7	57.3	42.7	100.0
		111101	60.1	39.9	60.1	39.9	57.1	42.9	100.0
		111110	83.2	16.8	76.0	24.0	74.1	25.9	100.0
		111111	91.7	8.3	89.0	11.0	86.9	13.1	100.0
전체			31.8	68.2	29.4	70.6	29.2	70.8	100.0

주: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6자리 코드(□□/□□/□□) 중, 첫 번째 2자리는 영유아의 부모 존재여부, 두 번째 2자리는 부의 소득유형별 보유여부(근로소득/사업소득), 세 번째 2자리는 모의 소득유형별 보유여부(근로소득/사업소득)를 나타내며 존재 또는 보유의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함

□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등에서 사회보험 및 국세청 소득 자료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1안) 공적 행정자료에 의해서 파악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 소득공제(30%)를 적용하는 방안

- 소득 개념의 상이성에 따라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되는 사업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보정률 적용 등)을 대신하여 우회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필요경비 차원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인정함으로써 공적 행정자료에 의해서 선정과정에서 적용되는 근로소득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임
- 이것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국세청 자료 등 공적 행정자료에 의해 근로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는 상시근로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법 상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공제를 동일한 원리에 따라 도입하여 적용하는 방안임
-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조사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소득 관련 자료에 의한 조사결과를 활용하되, 근로소득자에 대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방식의 적용을 검토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소득세 체계에서는 이미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 고려 및 근로유인 차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의 각종 복지제도에서는 수급대상 선정 및 급여 시에 다양한 방식의 근로소득공제(earnings disregard)를 적용함
- 우리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의 평균 근로소득공제 수준을 살펴보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 소득공제 적용 후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은 약 66.4%로 나타나 약 33.6%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음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 근로소득공제 규정이 있으며 2003년에 이를 근거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근로소득자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자활 소득공제 명목으로 자활사업참여자나 일부 계층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보육료 지원제도와 유사한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로,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2010년 도입된 장애인 연금에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매월 39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이처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면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 간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사업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
 - 이 때, 근로소득공제 적용방식(정액, 정률, 정액+정률 혼합방식, 자녀수에 따른 차등공제, 맞벌이가구 여부에 따른 차등공제 등)은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으며, 예산제약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 공제 시행을 전제로 근로소득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방식과 공제 수준을 우선적으로 확정된 후, 선정기준을 재조정해야 함
- (2안) 국세청으로부터 연계되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정방식에 대한 조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소득 개념의 자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활용하는 방안
- 국세청 사업소득금액뿐만 아니라 총 수입금액을 추가로 연계하여 제공받은 후 국세청의 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결정방식을 참고하여 업종별 표준경비율(현행 재산항목별 시가표준액에 대한 보정률과 유사)을 자체 개발하여 업종별로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 수준을 현실화하거나, 필요경비 중 일정비율(50%)만 인정하거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보정률을 산출하여 일괄 적용함으로써 상향 조정한 후 이를 활용하는 방안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부기장 등 근거자료에 따라, 또는 세법 상 규정된 경비율 제도에 의해 과세 목적을 위하여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보정률을 적용하여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

□ 보장단위(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 개편,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조사, 금융 재산 및 금융부채조회 실시,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폐지 등과 함께,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재산유형 분류기준 완화는,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과정에서 개선된 사항 중 대표적인 내용임

－ 기존에 2,000cc를 기준으로 분류되었던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발생시켜 왔던 사안으로, 이를 2,500cc로 개선하는 등 선정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2009년 개편 이후 자동차에 대한 재산유형 구분

일반재산 (월 4.17% / 3)	승용차(월 100%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2,500cc미만 차량 - 승합차로써 11인승 이상 자동차 - 이륜자동차 중 50cc이상 260cc 미만 차량 -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특수자동차(견인, 군난용 등) - 차령 6년 초과 모든 차량 - 3차녀 이상 가구의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2,500cc이상 차량으로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차량 - 이륜자동차 중 260cc 이상

□ 이러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 및 환산방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적용과정에서 여전히 자동차 배기량 기준 (2,500cc)에 대한 민원과 불만은 존재하고 있음

－ 이는 최근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SUV 등 일반적으로

많이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배기량이 2,500cc를 다소 초과하는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임

- 현행 선정방식에 따르면, 고가의 외국산 자동차일지라도 배기량이 2,500cc 이하일 경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 / 3)이 적용되지만, 차량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배기량이 2,500cc를 다소 초과하는 국산 자동차의 경우 거의 25배 높은 수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임
- 배기량은 낮을지라도 외국산 자동차나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신뢰성 및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보편적 보육료 지원제도로의 확대를 지향한다는 정책 목표를 반영하여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폐지 한 후 자동차가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 추가 확대과정에서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전체 영유아 가구의 약 85%가 자동차를 보유(2,000cc 이상 보유 비율 22.3%, 2,500cc 이상 보유비율 13.1%)하고 있으며, 보편적 보육료 지원의 취지를 반영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자동차 배기량 기준의 폐지가 필요함
- 이는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자동차 보유비율이 약 85% 수준에 이를 정도로 보편적 재산이며, 최근 FTA 등 자동차 수입 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배기량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국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영유아 가구가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참 고 문 헌

- 최현수 외(2009),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 최현수 외(2010),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에 따른 수급변동
심층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Anthony B. Atkinson, Lee Rainwater, Timothy M. Smeeding, 1996,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OECD.

Jean-Marc Burniaux, Michael F. Foster, Howard Oxley 외, 1998,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elected OECD Country,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No.189, OECD.

Michael F. Foster, 2000, Trends and Driving Factor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No.42, OECD.

European Commission(2009), "The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 A
comparative review of 30 European countries".

Eurostat Education Database(2010)

OECD Family database(2010)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2010)

OECD Education Database(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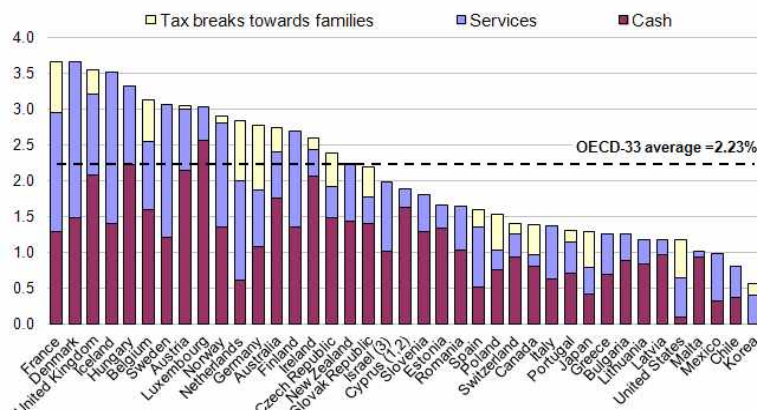
부 록

[부록 1] OECD 국가의 보육서비스

□ OECD 국가에서 가족지원 정부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23%임

- 가족지원정부예산이 GDP의 3.5%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프랑스, 덴마크, 영국, 아이슬란드이며, GDP의 1%미만을 차지하는 국가는 멕시코, 칠레, 한국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부그림 1-1〉 가족지원 정부예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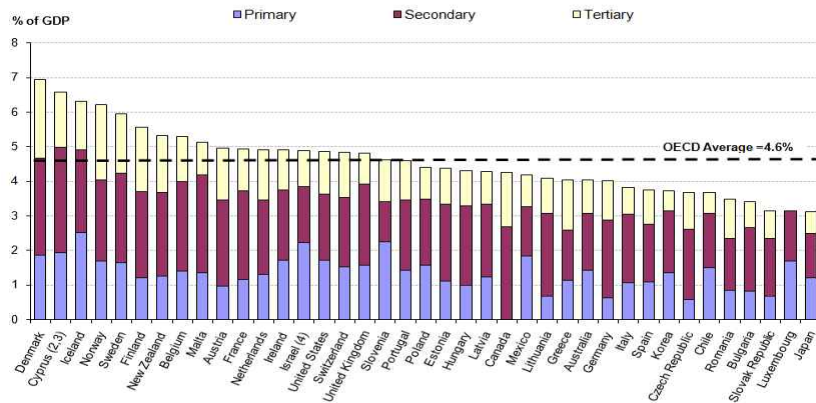


자료: Social Expenditure Database(2010), ESSPROS(2010).

□ 모든 OECD 국가들은 교육에 상당부분을 투자하고 있음.

— 1차, 2차, 3차 수준의 교육에 OECD 평균 GDP의 4.6%를 지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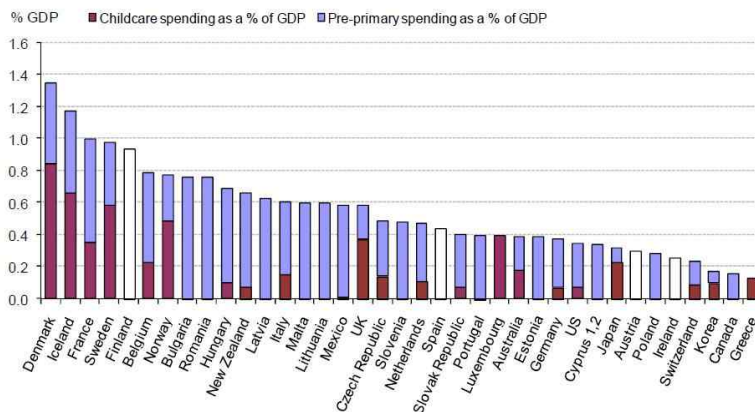
〈부그림 1-2〉 GDP수준에 의한 교육 정부지출(2007)



자료: OECD Education Database(2010), Eurostat Education Database(2010).

□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정책 예산에 상당 부분이 보육 및 교육비로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미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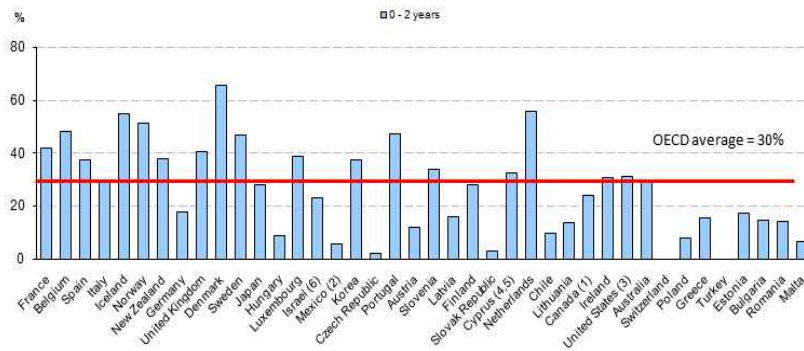
〈부그림 1-3〉 GDP 수준에 의한 보육 및 교육의 공공(지출)예산: 2005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0).

- OECD 국가들의 0~2세 평균 보육·교육 서비스 등록비율은 약 30%임.
 - OECD 국가의 평균을 훨씬 넘는 50% 이상의 국가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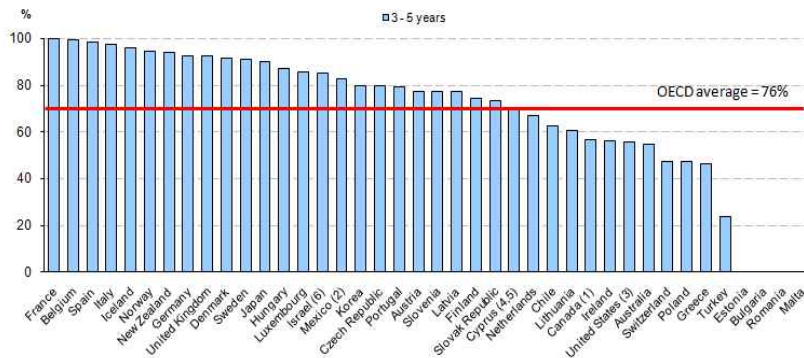
〈부그림 1-4〉 보육·교육서비스 등록비율(0~2세): 2008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0).

- OECD 국가들의 3~6세 평균 보육·교육 서비스 등록비율은 약 76%임.
 - 거의 100%에 가까운 국가는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임.

〈부그림 1-5〉 보육·교육서비스 등록비율(3~5세): 2008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0).

[부록 2] EU국가 보육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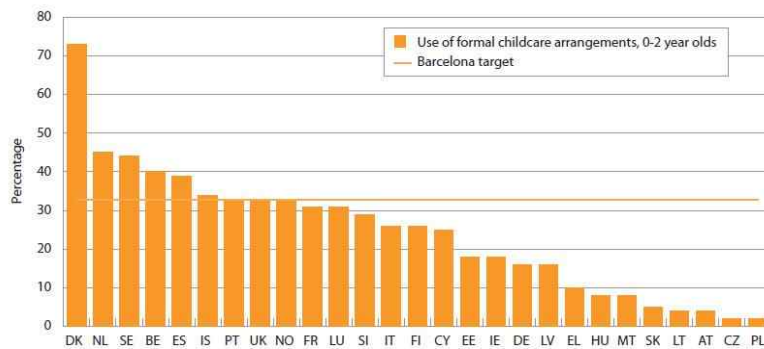
〈부표 2-1〉 EU국가

약어	국가명
AT	오스트리아
BE	벨기에
BG	불가리아
CY	키프로스
CZ	체코
DK	덴마크
DE	독일
EE	에스토니아
EL	그리스
ES	스페인
FI	핀란드
FR	프랑스
HU	헝가리
IE	아일랜드
IS	아이슬란드
IT	이탈리아
LI	리히텐슈타인
LT	리투아니아
LU	룩셈부르크
LV	라트비아
MT	몰타
NL	네덜란드
NO	노르웨이
PL	폴란드
PT	포르투갈
RO	루마니아
SI	슬로베니아
SK	슬로바키아
SE	스웨덴
UK	영국

□ EU는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0~2세 아동의 경우, 33%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대부분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아이슬란드는 이를 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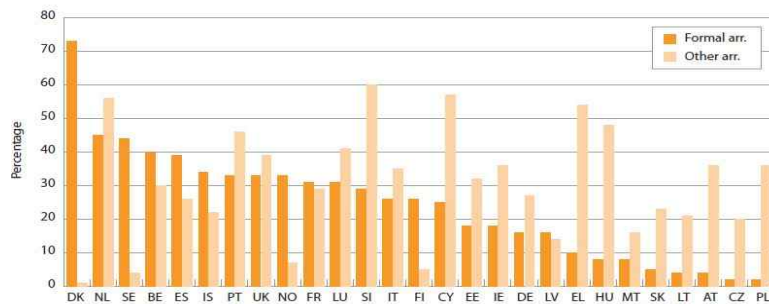
〈부그림 2-1〉 EU국가의 공식적 보육(방식) 사용률(0~2세)



자료: Eurostat, EU-SILC(2006)

□ 0~2세의 경우, 공식적인 보육지원 인프라의 사용률은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이 높으며, 체코와 폴란드는 거의 0%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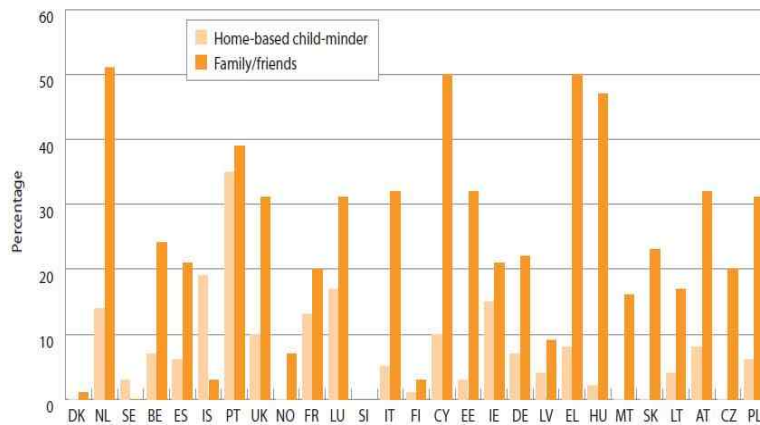
〈부그림 2-2〉 EU국가의 공식·비공식 보육(방식) 사용률(0~2세)



자료: Eurostat, EU-SILC(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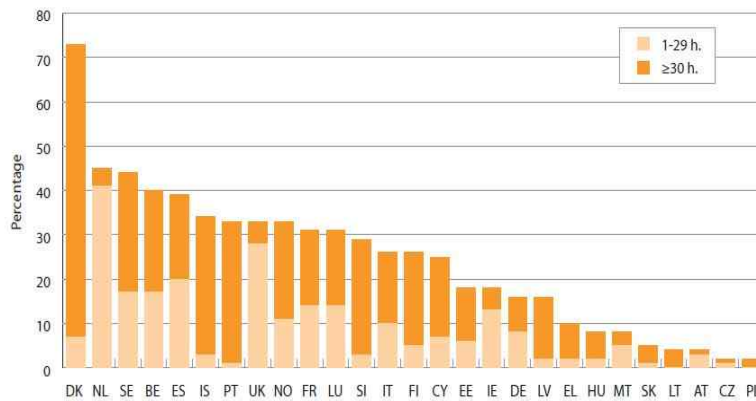
□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등은 제3자 고용에 의한 가정 내 보육(베이비시터)의 비율이 높으며, 키프로스, 헝가리 등은 가족이나 친구 등 친인척에 의한 자녀보육의 비율이 높음.

〈부그림 2-3〉 EU국가의 비공식(베이비시터·가족·친구 등) 보육(방식) 사용률 (0~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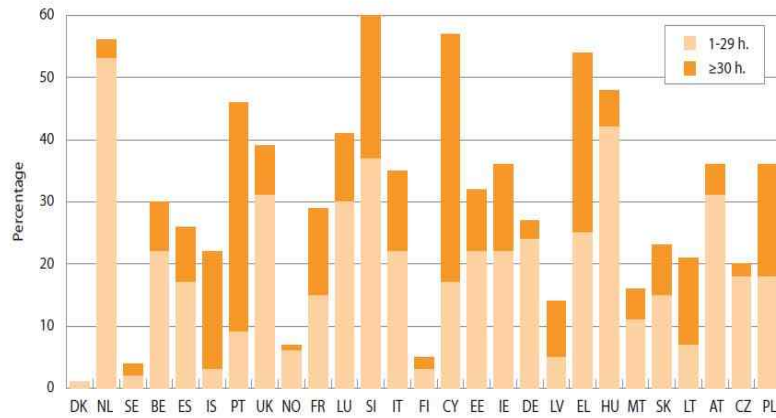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EU-SILC(2006)

〈부그림 2-4〉 EU국가의 공식적 보육지원 인프라 이용시간(0~2세)



자료: Eurostat, EU-SILC(2006)

〈부그림 2-5〉 EU국가의 비공식적 보육지원 인프라 이용시간(0~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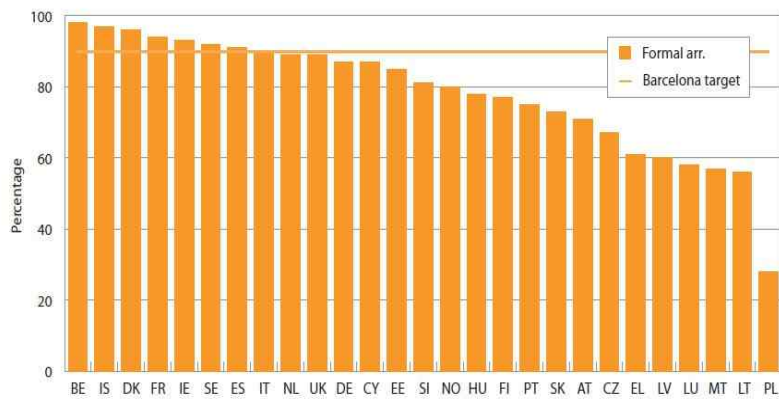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EU-SILC(2006)

□ EU는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3세~취학전 아동의 경우, 9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대부분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벨기에, 아이슬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스페인은 이를 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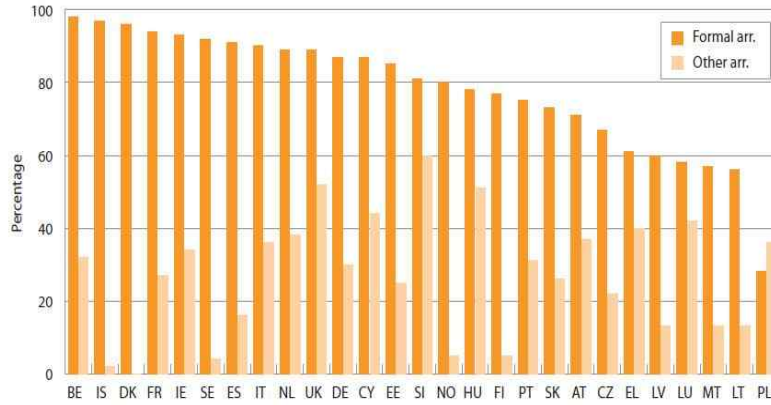
〈부그림 2-6〉 EU국가의 공식적 보육(방식) 사용률(3세~취학전)



자료: Eurostat, EU-SILC(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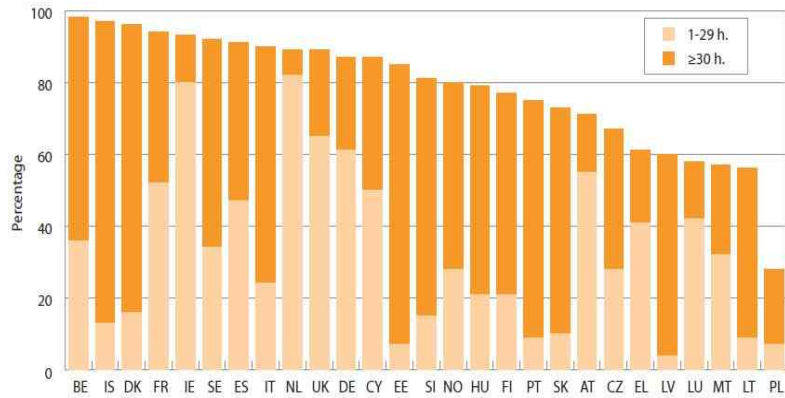
□ 3세~취학전의 경우, 공식적인 보육지원 인프라의 사용률은 벨기에, 아이슬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이 높으며, 폴란드가 가장 높은 수준임.

〈부그림 2-7〉 EU국가의 공식·비공식 보육(방식) 사용률(3세~취학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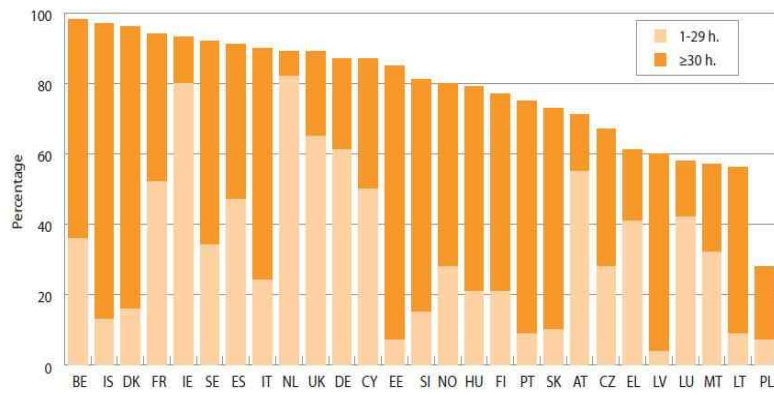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EU-SILC(2006)

〈부그림 2-8〉 EU국가의 공식적 보육지원 인프라 이용시간(3세~취학전)



자료: Eurostat, EU-SILC(2006)

〈부그림 2-9〉 EU국가의 비공식적 보육지원 인프라 이용시간(3세~취학전)



자료: Eurostat, EU-SILC(2006)

〈부표 2-2〉 EU국가의 학급당 아동수, 교사대 아동비율

국가	학급당 아동수	교수 대 아동비율
벨기에	·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최대 정원은 8명	·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4
불가리아	—	· 1대 5.9
체코	·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평균 아동수는 23.1명	· 1989년 이후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1:12~13명
덴마크	—	· 2~3세 아동의 경우 평균적으로 1:3비율이며, 3~6세 아동의 경우 평균적으로 1:6의 비율
독일	—	· 0~2세 아동의 경우 1:6.4명, 3~5세 아동의 경우 1:10명, 초등학생의 경우 1:10.5명
에스토니아	· 3세이하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경우 한 반당 최대 14명, 7세이하 취학전 교육시설의 경우 한 반당 20명	· 정확한 비율은 알려진 바 없고, 한 반당 교사 한명과 보조교사 1명 배치
아일랜드	· 미취학 교육시설의 경우 한 반당 24명	· 0~1세 아동의 경우 1:3(2006년) · 1~2세 아동의 경우 1:5(2006년) · 2~3세 아동의 경우 1:6(2006년) · 3~6세 아동의 경우 1:8(2006년)
그리스	· 보육시설은 12명 · 보육시설(2.5~6세)은 25명을 넘을 수 없음.	· 2004년 공공 보육시설은 1:18.5명
스페인	· 0~3세 아동의 경우 평균 14.1명, 3~6세 아동의 경우 평균 21명	· 2005~2006년 평균 1:10
프랑스	· 보육사는 한 명당 최대 4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음. · 보육시설에는 한 반당 28~30명	—
이탈리아	—	· 3~12개월 영아의 경우 1:5~1:6 · 1~3세 영아의 경우 1:7~1:10
키프로스	· 유치원은 한 반당 최대 16명	· 보육사와 보육시설의 경우 1:6
라트비아	· 0~2세의 경우 12명, 3~7세의 경우 24명	—
리투아니아	· 평균 10명	· 2005~2006년 평균 비율은 1:10
헝가리	· 보육시설의 경우 최대 12명, 유치원의 경우 최대 25명	· 보육시설의 경우 2:12명 · 유치원의 경우 2:22명
몰타	· 가정 내 보육사는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최대 6명까지 돌볼 수 있음.	· 0~1세의 경우 1:3 · 1~2세의 경우 1:5 · 2~3세의 경우 1:6

〈부표 2-2〉 EU국가의 학급당 아동수, 교사대 아동비율 (계속)

국가	학급당 아동수	교수 대 아동비율
네덜란드	· 0~1세의 경우 최대 12명, 0~4세의 경우 16명, 4~8세의 경우 20명	· 0~1세 1:4, 1~2세 1:5, 2~3세 1:6, 3~4세 1:8
오스트리아	· 지역마다 학급당 아동수에 차이가 있음. · 보육시설의 경우 11~14명, 유치원의 경우 20명, 보육사는 5명	· 보육시설 1:5 · 유치원 1:14
폴란드	· 한 반당 아동수는 규제하고 있지 않음.	· 평균 1:15
포르투갈	· 보육시설에서는 최대 10~12명, 유치원에서는 최대 25명, 보육사는 최대 4명, 방과후 교실은 20명	· 보육시설 2:12 · 유치원 1:25 · 방과후교실 1:15
슬로베니아	· 1~3세의 경우 최대 12명, 3~6세의 경우 최대 22명	· 1:9.6
슬로바키아	· 유치원의 경우 한 반당 평균 20.9명 · 헝가리 언어를 하는 유치원의 경우 평균 17명	· 1:10.6
핀란드	· 한 반당 아동수에 대한 규제는 현재 없으며, 규제 필요성을 논의 중임.	· 0~3세 1:4 · 3~6세의 경우 종일제 1:7, 반일제 1:13
스웨덴	· 취학 전 교실에서는 평균 16.7명 · 여가활동센터는 평균 31.7명	· 취학 전 학교 1:5.1 · 여가활동센터 1:18.9
영국	· 보육시설 한 반당 평균 30~35명 · 아동 1명당 면적에 대한 기준도 있음.	· 0~2세 1:3, 2세 1:4, 3~7세 1:8
아이슬란드	—	· 보육사 비율은 1:4
리히텐슈타인	· 공공보육시설은 최대 20명(실제적인 평균은 15명) · 민간보육시설은 10~13명	· 취학전 보육학교 1:14 · 보육시설 1:5
노르웨이	—	· 0~3세 1:7~9 · 3세 이상 1:14~18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9), "The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 A comparative review of 30 European countries"

〈부표 2-3〉 EU국가의 보육제도에 의한 부모 보육료

국가	보육시설 가격	적절성
벨기에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계층별 요금을 지불함. (1일 EUR 1.99~28.04) · 평균 아동 1인당 하루 EUR 13.07 	-
벨기에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부담 요금은 소득계층별임. · 이례적으로 비용을 감면하거나 무료가 가능함. · 보육료는 12세 아이까지는 소득공제가 됨. · 2006년 0~2세를 위한 평균 전일제 보육은 평균 EUR 12.39 · 방과후 학교 보육 부모비용은 1일 EUR 0.90~4.47 	-
불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 소유의 유치원(유아원)의 1달 평균 비용은 EUR 20(BGN 40). · 둘째 아이 이상이면 둘째 아이는 BGN 10을 감면해줌. 	-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는 미취학아동시설(보육시설)마다 다름. · 일반적으로 유아원보다 유치원이 공립보다는 사립시설의 이용료가 높음. · 부모는 기관·식사·다과 등의 부분이 포함되는 소득계층별 요금을 지불함. · 공공 유치원은 기관 요금을 실제 평균 비용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평균 한 달 소득의 약 3~4%를 유치원에 소비하나, 한부모가족은 그들의 소득에 6% 정도를 소비함.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비용은 소득계층마다 다르며, 저소득 부모는 무료임. · 0~5세의 미취학아동을 위한 비용의 25%, 취학자녀를 위한 비용은 33%가 최대임. · 비용은 지자체와 보육제도 사이에서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을 위한 비용이 꽤 낮은 것처럼 보여도 맞벌이가구 혹은 저소득 가구에 있어서 보육을 위한 감소된 비용을 위해 소득 한계상한 소득 가족을 가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는 지역사회와 지역에 따라 다른 소득계층 요금을 지불함. · 저소득 가정은 공공 보육과 관련하여 중간 혹은 고소득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요금을 낸. · 공공 보육의 비용과 비교하여 비공식적 보육제도는 대체적으로 좀 더 비쌈. 	-

〈부표 2-3〉 EU국가의 보육제도에 의한 부모 보육료 (계속)

국가	보육시설 가격	적절성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짐. · 부모는 음식공급 비용과 행정, 스텝, 세금 등의 비용을 부분적으로 부담함. · 부모에 의해 부담된 것은 최저 임금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 · 2007년부터 지방 정부는 어린이가 유치원 또는 탁아소에 다니지 않은 부모를 위해 검증된 베이비시터의 비용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공공 육아 시설 평균 비용은 국가적 최저 임금의 12%와 평균 임금의 4%였음.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 보육 시설의 비용이 높은 결과로서 보육의 공공 기금은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이 높음(그러나 연구에서는 아일랜드사람들이 EU평균에 비해 약 2배를 지불한다는 것을 감춤). · 보육료는 특히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고소득 가정과 한부모가족의 불리한 조건에 그 이슈가 있음.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는 지역사회와 지역에 따라 다른 소득계층별 비용을 지불함. · 공공 탁아소와 육아실의 매월 요금은 EUR 300을 초과하지 않는 반면 사람의 경우에는 EUR 300~600사이에 있음. 	-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서비스는 비용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미만 아이를 돌보는 미취학 교육과 보육서비스에 매년 평균 지출은 2005년 EUR 606, 이는 같은 해 최소 급여 인정액의 거의 9%와 평균 급여의 3.2%임.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는 소득계층별 요금을 지불하는데 이는 탁아소 이용 또는 베이비시터에 의존하는 실제 가격임. · 2배의 최소임금 이상의 소득을 가진다면, 최소한의 보육 해결책은 등록된 베이비시터임. · 가족 소득이 2배의 최소 임금보다 적거나 같을 때, 보육시설 가격은 좀 덜함. 	-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공공 보육은 부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 · 부모는 지역사회와 지역적으로 다르지만 소득계층별 비용을 지불함. · 많은 지자체에 의해 수립된 최대 비용은 대략 비슷하지만 저소득가정에만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제공함. 	-

〈부표 2-3〉 EU국가의 보육제도에 의한 부모 보육료 (계속)

국가	보육시설 가격	적절성
키프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 보육은 대개 고비용임. · 공공(공동)보육은 소득비례 좀 더 적당한 비용임. · 최소 많은 정부 보육의 비용은 또한 소득계층별로 있고, 몇몇의 아동은 무료임. 	-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는 음식과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평균 1일당 EUR 3.5 · 낮은 임금을 받거나 실직한 가족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원이 적용가능함. · 사립 보육은 1일당 EUR 14정도 비쌌. 	-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혹은 지자체 소유의 유치원 전일제를 위한 매월 평균 비용은 EUR 35 	-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계층별로 비용이 책정되는데 저소득 혹은 중산층소득의 경우 일년에 EUR 750~10,000의 정부지원을 받음. · 아동이 공식적 구조의 보육을 이용한다면 부모는 전체적으로 연간 EUR 3,600에 이르는 과세 대상 소득의 감소가 가능함. 	-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보육서비스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 · 단지 유치원에서는 음식은 지불되어야만 함. · 극소수의 기존 사립 보육시설은 단지 고소득층인 가족에 의해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가격을 부과함. 	-
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음. · 2007 예산안에서 허가된 보육서비스 사용에서 과세해야 하는 양으로부터 부모에게 EUR 932의 감면을 서약함. 	-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개의 소득 수준을 위해 보육서비스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 · 합법적 최저 임금의 130%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위해 첫째 아이에는 시간당 EUR 0.33, 둘째 아이에는 시간당 EUR 0.19을 지원함. · 일반 총소득의 세 배를 버는 가정에서 양은 EUR 2.20과 EUR 0.46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2007년에 보육비용은 특히 중산층소득과 고소득 집단을 위해 상당히 감소함.

〈부표 2-3〉 EU국가의 보육제도에 의한 부모 보육료 (계속)

국가	보육시설 가격	적절성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와 재정지원 가능 여부 모두 오스트리아의 9주마다 다름. · 보육료의 최소는 한달에 EUR 0~480 사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료는 부모에 의해 제기되는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임.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심의회는 종종 비용수준을 공공 미취학과 보육원에 의해 부과됨. · 공립과 비공립 시설 사이와 내부에 다양한 변수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보육료는 최저 임금 노동자에게 상당히 높고 사립(비공립) 보육의 비용은 사실상 너무 고가임. · 평균 수입의 개별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위해 상황은 오히려 공립이 적당하지만 그렇게 비영리섹터에서 더 적음.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이거나 비영리적 기관에 의해 제공된 보육서비스는 부분적으로 상태에 의해 자금이 공급됨(가족은 그들의 경제 상태에 따르면 지분을 지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봉급에 해당하는, EUR 403의 일인당 수입을 가진 가족은 각각 아동을 위한 탁아소 또는 미취학 보육을 위한 EUR 121과 방과 후 보육을 위해서는 아동 1인당 EUR 81을 지불함. · 이는 약 EUR 1,200을 버는 젊은 부부가 아동의 보육을 위해 그들의 수입 중 대략 10%를 지불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대부분의 부모는 보육의 비용이 합리적인이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보이거나(74%), 약 20%는 비싸거나 매우 비싸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는 자치체에 의해 규정된 소득계층별 요금을 지불함. · 부모는 대개 비용의 10~80%를 기여함. · 부모 기여의 평균은 25~30%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아소의 비용이 다른 EU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음.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는 자치체에 따라 소득계층별 요금을 지불함. · 2007년에 평균 월 비용이 슬로바키아 실질 평균 임금의 대략 8%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탁아소는 꽤 알맞으나 사립 보육시설은 비쌈.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는 가족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전일제 아동 보육에 EUR 18~200까지 이르도록 매월 요금을 청구함. · 저소득가정은 보육료를 청구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전일제 보육제도는 핀란드 사람들을 위해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9), "The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 A comparative review of 30 European countries"